

비재무정보 공개 확산에 따른 공공기관 ESG 경영현황 연구

장 윤 정

2022. 7.

비재무정보 공개 확산에 따른 공공기관 ESG 경영현황 연구

장 윤 정

2022. 7.

비재무정보 공개 확산에 따른 공공기관 ESG 경영현황 연구

장윤정 부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fis.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발간 보고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이 향후 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재정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6908-8157 ✉ analysis@kpfis.or.kr

요약

1 연구의 배경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공조가 활성화됨에 따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도입이 여러 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2015년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점검을 2023년부터 실시기로 함
 - 경제활동 중 생산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 추적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환경영향을 포함한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확산
- 본 보고서는 비재무정보 공시 및 평가제도의 맥락에서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기관들이 공시한 ESG 경영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국내외 주요 ESG 공시 가이드선의 지표체계와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체계 구성 비교분석
 - 저탄소 경제 실현과 연관된 환경부문 지표를 비롯하여 2022년 추가된 항목인 동반성장평가 등 실적을 공기업·준정부 기관 규모별, 에너지·SOC 등 기관 산업분야별 분석

2 비재무정보 공개의 확대

- 기관 운영의 환경·사회적 영향, 윤리경영 등의 비재무 경영성과가 기관의 지속가능성과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시각 대두
 - 2000년대 초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UNGC 출범, 세계투자자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책임투자(PRI) 운동 등은 기업성과에 대한 시선을 금전적, 재무적 이익에서 사회, 환경 등으로 확장시키는 계기로 작용
 - E(환경)S(사회)G(거버넌스)라는 용어는 2004년 UNGC의 보고서 'Who cares wins'에서 비재무성과의 3개 영역을 정의하는 의미로 처음 등장

- 한편 2015년 파리협정 등 199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기후변화 공조 대응은 2030년 탄소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한 기업 행태 변화 독려
 - 온실가스 배출량을 등록하고 공개함으로써 감축정책 이행상황에 대한 대내외 검증 가능하게 하는 제도 구축

□ 특히 2021년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 상향조정, 석탄발전소 사업주체에 대한 외국 투자자 투자 철회 등이 ESG에 대한 관심을 높였음

- 정부는 2021년을 ESG 원년으로 선포하고, 11월 기후변화국 당사자협의회(COP26)에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함
 - * 당초(2015년 파리협정)목표: 2030년까지 예상배출량(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
→상향목표: 2030년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40% 수준까지 감축
- 이보다 앞서, 한국전력에 투자하고 있던 네덜란드 연기금(APG)은 석탄발전소 추가건설을 이유로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투자 철회

□ 공공기관에서는 경영평가 항목에서 2017년 이후 사회적가치가 강조되면서 비재무성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 2018년부터 '경영관리' 부문에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이 공기업 22점, 준정부기관은 20점 비중으로 신설되었음
 - 주요 평가지표는 일자리 창출, 안전 및 환경,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등이며,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ESG 지표의 주요 영역을 포괄

□ 공공기관별 ESG 경영 사례를 분석하면, 주로 고유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나 유관 사업분야 확장을 통해 ESG 경영을 추진

- 금융기관(국민연금, 사학연금)은 고유사업인 연기금 운용시 투자대상기업을 ESG 관점에서 평가하는 체계 수립
- 에너지 공기업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으로 주 사업분야이던 화력발전이 직접적 영향을 받음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발전 기술 개발에 투자
- SOC 분야 기관은 사회적 가치 중 특히 사업장 안전을 강조

〈표 1〉 기관 유형별 ESG 경영 추진 사례

유형	금융	에너지	SOC	기타
기관명	국민연금, 사학연금	서부,남부,동서발전, 한수원 등 한전 발전자회사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교통안전공단	보건복지인재원
고유 사업분야 연관 ESG 추진 사례	ESG 관점의 투자대상 평가	기후변화대응 발전기술 개발 투자	사회적가치 중 안전 강조(도공), 에너지 재활용 기술 개발(교통안전공단)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공통적인 활동	지역사회 기부활동 협력사 대상 ESG 교육,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등			

3 국내외 주요 공시체계와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비교

- ESG 공시기준은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요소를 체계적으로 개념화하여 기관과 투자자 양측에게 경영의사결정 및 투자판단 근거 제공
- 다양한 공시기준이 최근 국제 표준으로 수렴해가고 있는 추세임
 - 지속가능경영 보고기준* 및 탄소배출량 공개기준** 등 공시기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지속되어 투자자들이 단일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2021년부터 협의체가 구성돼 공시기준 단일화 노력
 - * GRI(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기준 등
 - ** CDP(탄소배출량 프로젝트), TCFD(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 등
 - IFRS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 (IFRS-S1 및 S2, 22.3.31 초안공개)
- 국내외 주요 ESG 공시 체계를 분석하고 이들 기준이 개념화하는 ESG 각 차원 및 세부항목을 현행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과 비교
 - 주요 ESG 공시체계에는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으나, 통합공시 항목에는 없는 항목이 있다면 이를 통합공시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 가능
 -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은 41개, 세항목 98개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ESG 관련

공시 항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세항목 기준 총 42개임

- 2021년 추가된 항목 12개, 2022년 추가된 항목 10개 및 기존 노동조합 관련현황, 이사회 회의록, 휴직·출산휴가 현황 등 20개 항목임
- 추가적으로 현행 공시정보를 통해 산출할 수 있는 성별 임원 비율, 임금 비율, 보상비율(직원보수 대비 임원보수) 또한 ESG 공시 항목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현행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은 국내외 주요 공시기준의 분류에 따른 대부분의 ESG 공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공공기관 특성 상품 생산·판매보다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주된 사업이므로 상품라벨링, 제품안전 등의 지표는 통합공시에 적용 어려움
- 또한 주주공개가 제한적인 특성상 거버넌스 부문 항목이 적는데, 향후 추가를 고려하고자 한다면 노동이사제 도입현황, 이사회 내 ESG위원회 운영현황 등 추가 가능

〈표 2〉 주요 ESG 공시 기준 공통포함항목과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비교

	해외	국내	공공기관 통합공시상의 ESG 공시 항목
환경	온실가스배출 에너지 (소비, 집약도, 관리) 수자원 폐기물	기후변화 (온실가스배출량) 폐기물배출 법규 위반 사고	온실가스 에너지사용 폐기물 물사용 법규위반사항 친환경차 의무구매제 녹색제품구매실적
사회	인권 (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 금지) 다양성 (성정체성, 인종) 직원 안전, 보건 직원 처우 (보상비율, 훈련 및 교육) 소비자 가치 (라벨링, 제품안전, 고객개인정보)	인권 (다양성, 평등) 산업안전, 재해 고용 및 노동 제품안전 개인정보보호 하도급·동반성장 공정경쟁 징계현황	인권경영현황 노동조합 관련현황 다양성(여성비율) 정보보호수준진단결과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일가정 양립관련 휴가 및 휴직 현황 공정거래 동반성장평가결과 봉사·기부 실적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해외	국내	공공기관 통합공시상의 ESG 공시 항목
거버넌스	사업윤리 반부패정책 지속가능 경영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	이사회 구성 주주의 권리 ESG 대응 관련 이사회 활동 감사(기구,제도)	이사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내부부서,전문성) 자본금 및 주주현황 청렴도평가결과

4 공공기관 ESG 공시 내용 분석

□ 다음으로 ESG 항목별 공시내용을 통계분석하여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황을 파악

- 환경부분 대상 항목은 2022년 7월 공시 예정인 2020년 기준 녹색구매비율, 온실가스 감축률, 저공해 자동차 도입 현황이며, 각각 환경부 발표자료를 사용하여 분석 진행하였음
- 사회부분 대상 항목은 2021년 7월에 공시되었던 2020년 기준 혁신구매액, 기부 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산업재해·안전사고 사망자 수 및 202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평가결과 등급임
- 거버넌스부분 대상 항목은 2021년 공시되었던 임원 및 직원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한 여성 임원 비율, 직원 임금 대비 상임임원 평균 보수 등임

□ 12개 ESG 항목 분석 결과 녹색구매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등은 전반적 실적이 우수하나 온실가스 감축률, 동반성장평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등은 기관별 편차가 크고 실적 개선 여지 존재

- 같은 환경부분 항목이라도 시행 이력이 오래된 제도(녹색구매비율)가 최근 도입된 제도(저공해차 구매·임차제,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실적이 우수
- 혁신구매액의 경우 상위 10개 기관 실적이 전체의 94% 차지, 기부금액은 1개 기관 실적이 전체의 10% 차지하여 기관 규모에 따라 실적이 편중 되는 현상이 존재
- 평가에 기반한 공시항목은 기관(군)별 상대평가 성격이 있으므로 기관간 어느 정도의 편차가 필연적으로 존재

〈표 3〉 주요 ESG 공시항목의 기관별 실적 특징

영역	공시항목	평균	특징
E 환경	1) 녹색구매비율	83.3%	100%달성 23개, 90%대 달성 기관 91개 기관으로 대부분 기관에서 관리가 잘 되는 지표
	2) 온실가스 감축률	20.9%	산업진흥정보화 유형 기관의 감축률이 40.7%로 가장 높고, 에너지 유형 기관이 다음이며 감축에 실패한 기관도 다수 있음
	3) 저공해 자동차 현황	70.3%	의무구매비율 달성률 70.3%로 녹색구매에 비해서는 달성률이 낮음. 타 지표에서는 달성률이 높은 에너지 유형 기관이 여기서는 달성률이 가장 낮고 다음 고용보건복지, 산업진흥정보화 유형 기관 순으로 달성률이 낮음
S 사회	4) 혁신구매액	12.9억원	준시장형 SOC 공기업과 시장형 에너지 공기업이 혁신구매 총액에 기여분이 크고 상위 10개 기관 실적이 전체의 94%로 집중도가 높음
	5) 기부 실적	10.3억원	SOC, 에너지, 금융, 문화예술외교 순으로 기부금액이 크고 기부금액이 0인 기관도 350개 중 49곳 존재
	6)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5.7억원	혁신구매액과 동일하게 SOC 기관 및 에너지기관 실적이 총액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함. 실적 0인 기관은 364곳 중 18개 기관
	7) 산업재해·안전사고 사망자 수	0.6명 (5년누적)	366기관 중 10%인 36개 기관에서 지난 5년간 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상위 10개 기관에 SOC 공기업 5개, 에너지 공기업 3개 기관 포함
	8) 동반성장 평가결과	양호	에너지 유형 기관의 성과가 우수하고 농림수산환경, 고용보건복지 유형은 개선필요 등급 기관 비중이 높음. 고용보건복지 유형 기관중 기타공공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이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사례도 많음
	9)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	보통 ~양호	SOC기관의 평균 등급이 가장 높으며 기타공공기관 및 연구교육·기타 영역의 기관을 중심으로 향상 필요
G 거버 넌스	10) 청렴도 평가결과	2~3 등급	1~5등급 중 주로 2,3등급에 분포하며 다른 항목에서는 우수한 공기업군에도 1등급 기관은 없음
	11) 여성 임원 비율	22%	여성 진흥 목적의 공공기관에서 가장 크고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고용보건복지 유형에서 높음
	12) 직원 평균 보수 대비 상임 임원 평균 보수	2.5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금융 유형에서 월등히 높고 SOC 유형에서 낮게 나타남

5 시사점

□ 공공기관 ESG 경영강화의 구체적 목표수준 설정 필요

- 모든 공공기관이 모든 ESG 경영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
 - ‘청렴도평가등급’, ‘동반성장평가’ 등은 공공기관간 상대평가 결과이므로, 성과가 좋은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이 불가피하게 항상 존재
- 기관별 주요사업과 연관된 항목의 실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관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ESG 경영강화의 구체적 목표수준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 예시: 공기업의 경우 각종 평가에서 현재 등급 3년간 유지
기타공공기관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중 1개 이상에서 최고등급 충족
- 지속가능보고기준에 대한 세계적 논의동향 또한 일률적인 기준 적용보다는 산업별, 기관별 특성에 따라 공시 및 평가 항목을 달리 할 필요성을 중시

□ 기타공공기관의 ESG 역량 강화 지원 필요

- 위에서 살펴본 12개 지표 모두에서 기타공공기관 유형의 평균 실적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비해 저조함
- 일부 지표는 대규모 에너지·SOC 공기업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다른 유형 기관에는 실효성 적음
 - 예시: 혁신구매액의 경우 상위 10개 기관 실적이 전체의 94%차지

□ ESG 성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사망자 수 등 리스크 관리 지표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경영현황을 파악할 필요

- 기부, 구매실적등이 상위권이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상위권인 기관들이 존재하므로, 기관의 지속가능 경영 수준 판단시 과실과 성과 양 측면을 골고루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C/O/N/T/E/N/T/S

요 약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2

II 비재무정보 공개 확산의 배경과 흐름

- 1. 개념의 발전과 배경 5
- 2. 공공기관 운영에서 ESG 경영의 확대 7
 - 가. 비재무성과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7
 - 나. 기관별 ESG 경영 도입 사례 9
 - 다. 소결 22

III 비재무정보 공시 주요 기준

- 1. 해외 공시기준 24
 - 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기준 24
 - 나. SASB(Sustainable Accounting Standard Board) 기준 27
 - 다. 국제 지속가능 보고기준 (IFRS S1,S2) 28
 - 라. EU 지속가능 보고기준 (Europe Sustainable Reporting Standard, ESRS) 28
 - 마. 세계거래소연맹 30
 - 바. 주요 국제 기준 비교 30
- 2. 국내 공시기준 33
 - 가. 한국거래소 정보공개 가이드스 33
 - 나. K-ESG 34
 - 다. 주요 국내 기준 비교 36
- 3.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과의 비교 38

IV

공공기관 ESG 공시 내용 분석

1. 분석의 개요	43
2. 환경 부문	45
가. 녹색제품 구매 실적	45
나. 온실가스 감축률	47
다. 저공해 자동차 현황	49
3. 사회 부문	52
가. 혁신구매액	52
나. 기부 실적	54
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56
라. 산업재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	57
마. 동반성장 평가결과	59
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	61
4. 거버넌스 부문	64
가. 청렴도 평가결과	64
나. 여성 임원 비율	65
다. 직원 평균 보수 대비 임원 보수	67

V

시사점

1. 요약	69
2. 공공기관 ESG 경영관리 정책 방향	71

VI

참고문헌

1 연구의 목적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ESG가 민간 및 공공부문 전반에서 경영 추진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기업과 기관 경영은 이윤으로 대표되는 재무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환경·사회적 영향과 지배구조 등 비재무정보까지 중요한 성과로 간주하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가 바탕을 마련하였고,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에 대한 논의에서 탈탄소화가 부각되는 추세를 통해 추진력을 얻고 있다. 또한 주주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한 윤리투자 및 사회적 책임투자 운동이 지난 10여년간 확산되어 기업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내에 다양성, 인권존중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국제금융시장은 이제 기업의 투자가치와 채무이행가능성을 평가할 때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성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결부된 투자자금 규모도 상당하다.¹⁾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부문의 육성방향과 이에 적합한 규제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도 이윤을 내는 경영주체는 아니지만 정부 운영도 국제적인 ESG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래 ESG라는 용어의 등장 배경이 되었던 ‘밀레니엄 개발목표’ 및 이를 이어받은 ‘지속가능 목표’가 결국 각국 정부가 합의한 정책의 영역인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정책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이행 확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자본시장의 투자결정요소와 국제사회에서의 평판등을 고려할 때, ESG 정책운영은 향후 정부 재원조달에도 중대한 영향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부문과 민간경제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현

1)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ESG 자산은 2020년 35조달러(한화 약 4경 4,600조 원)를 초과하였으며, 글로벌 투자자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2025년 50조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블룸버그(2021), ESG Assets may hit \$53 trillion by 2025, a third of global AUM, 2021.2.23.기사)

황은 국내에서 연구주제로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축적된 ESG 경영현황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소수의 연구도 ESG 경영의 당위성과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거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중 일부 영역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 통합공시 제도를 통해 ESG 경영현황에 대한 표준화된 형태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5년에 대해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연구분석 결과는 희소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비재무정보 공시 및 평가제도의 맥락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공공기관들이 공시한 ESG 경영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저탄소 경제의 실현과 연관된 환경부문 지표를 비롯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부실적, 장애인생산물 구매 제도 운영현황 등 실적을 공기업·준정부 등 기관 분류별 뿐만 아니라, 에너지·SOC 등 기관 산업분야별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공공기관 경영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세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비재무정보 공개 확산과 배경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두 번째로 논의 과정을 통해 정립된 국내외 주요 비재무정보 공시 및 평가 지침을 살펴보고, 이를 상호 비교분석한 뒤 현재의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과 비교하여 알리오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공시내용을 식별한다. 세번째로 공공기관 규모별, 영역별로 해당 공시내용을 분석하여 특성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성장에 있어서 경제적, 양적 개선 이외의 목표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멀게는 환경 이슈가 제기된 1980년대부터로 볼 수 있다. 책임투자 원칙의 확산, 국제경영자 포럼(WEF)과 투자자 포럼이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에 동참하면서 본격적 확산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외형적·금융적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로 빚어졌다는 반성 또한 비재무적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

기로 작용하였다.

기업(혹은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재무 경영상황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비교하며 투자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보 수요는 공신력있고 표준화된 정보, 평가 기준 또는 제도화된 공시 기준의 마련을 촉진하였다. 최초에는 주로 MSCI, 서스틴 애널리틱스와 같은 비재무정보 전문 기업 평가 기관을 통해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정보가 생산되었다. 이후 기업 입장에서 평가 기준을 알고 이에 맞춘 경영관리를 해나가며 표준적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보고 기준 또는 공시 기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사회와 책임투자 등 지속가능 경영 전반에 있어서는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약칭 GRI) 기준이나 이슈별·산업별 중대성 차이를 감안한 지속가능회계기준(Sustainable Accounting Standard Board, 약칭 SASB) 기준이, 기후변화 관련 경영정보 보고 기준으로는 탄소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약칭 CDP) 및 기후관련 재무정보 보고 TF(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준등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여 불확실성과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표준화 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제회계기준·책임투자 기구를 통해 수렴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회계기준재단 IFRS는 2021년 산하에 ISSB(International Sustainable Standard Board)를 설치하여 GRI기준, SASB기준과 TCFD 권고안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초안을 2022년 3월 발표하였다. 한편 유럽의 특성을 반영하고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rope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ESRS)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ESRS 초안을 4월 공개, 8월까지 의견수렴 할 예정으로 있어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기준 수렴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해외 논의 동향의 특징은 국제 표준 수립에 있어 공시의 일반원칙 정립과 기후변화 대응 공시 요건 정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사회부분과 거버넌스 부분의 국제 공통 공시 기준 마련은 추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어떠한 항목을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공시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기관의 미래지향적인 시선에 의한 선택과 투자자의 재무가치 평가를 위한 통일된 기준이 공존해야 한다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에 대한 ESG 경영현황 평가 및 경영공시 기준이 수립되는 중이며, 2030년으로 예정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의무공시 시점까지 확립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민간부문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같은 NGO 및 금융투자업계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ESG 경영 평가와 공통된 기준 수립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왔고, 지난해(2021년) 말 부터는 회계기준원을 중심으로 IFRS 지속가능공시표준에 대응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 대상 ESG 정보공시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보공개 가이드언스를 발표한 바 있고, 산업부 주도하에 K-ESG 가이드라인도 발표된 바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각 측면에서 기관과 기업의 경영 노력이 필요한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모범경영을 평가할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지정항목과 위에서 열거한 ESG 공시·평가기준을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 공시제도의 발전 및 개선사항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통합공시 지정항목 41개, 세항목 98여개에 대해 직전 5년간의 경영현황을 표준화된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이 중에는 해당 기관의 E(환경)·S(사회)·G(거버넌스) 경영현황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사회부문에서 사회공헌활동,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거버넌스 부문에서 이사회 구성현황 등이다. 총 관련 항목은 세항목 기준 40여개이다.²⁾

마지막으로 해당 지표에 대해 각 기관이 공시한 내용을 기관규모와 지정유형별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기관의 산업유형별로 SOC, 금융, 에너지, 문화, 기타 등으로도 나누어 살펴본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경영이나 비재무적 성과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기관별로 ESG 경영의 영역을 특화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바 있는데, 산업영역별로 기관의 ESG 경영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지를 본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의 기관별 경영방향이나, 정책당국의 공공기관 관리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2022년 경영공시 항목에는 개인정보보호, 에너지·폐기물, 동반성장 평가결과 등 10개의 ESG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들 항목의 최초 공시정보는 2022년 7월 말 공개 예정이다.

II

비재무정보 공개 확산의 배경과 흐름

1 개념의 발전과 배경

UNEP(유엔환경계획)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류가 빈곤과 인구증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 파괴 등의 위기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면서, 세계 정상들은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인간이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후 1997년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목표제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는 모든 국가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였다.

2000년 출범한 UNGC(유엔글로벌콤팩트)를 통해 ESG라는 용어가 비로소 등장하게 된다.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지속가능 개발목표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였던 당시 UN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세계투자기구와 경영자총회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을 제안한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형성된 것이 UNGC라는 시민기구이다. UNGC가 2004년 보고서 ‘Who Cares Wins’를 펴내면서 “증권거래와 자산운용, 분석에 있어 환경·사회·거버넌스 이슈를 보다 잘 통합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제언³⁾”이라는 부제를 단 것이 ESG의 시초로 알려지고 있다.

유사한 지속가능 정보공개 기준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들의 투명성과 단일성 요구가 거세어짐에 따라, 2020년 9월 SASB를 비롯하여 GRI, IIRC(국제통합보고위원회,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CDSB(기후 공개 기준 위원회, Climate Disclosure Standard Board), CDP(탄소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등 비재무정보 공개 표준 관련 5개 기관이 공통으로 기후관련 재무공개 기준

3) 원문은 “Recommendations by the financial industry to better integrat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 analysis, asset management and securities brokerage” 이다.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5개 기관간 협력이 이루어지던 2020년 SASB와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의 통합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1년 6월 공식적으로 글로벌 비영리재단인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이 탄생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재단인 IFRS는 지속가능보고기준 단일화를 위해 국제 지속가능보고기준 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le Standard Board, 약칭 ISSB)를 2021년 11월 설립하여 ESG를 포함한 지속가능 보고기준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3월에는 지속가능보고기준 초안(IFRS S1, S2)를 발표하였다.

국제 표준화 시도가 가장 활발한 지속가능성 공시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부분이다. 2015년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였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까지 억제하기 위한 노력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21년 11월에는 기후변화당사자국회의(COP26)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의 4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을 발표하여 국가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ESG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는데, 이에 기여한 사건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로 네덜란드 연기금(APG)이 석탄발전소 추가건설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투자 철회를 선언하고 약 800억 규모의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상향조정하면서 각 부문별 탄소 감축이 실질적인 과제로 부상한 사건이다. 즉,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자 유치가 기업의 환경 책임 경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경험하고, 국가적인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천명함과 동시에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우리 경제도 본격적인 ESG 경영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2 공공기관 운영에서 ESG 경영의 확대

가. 비재무성과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경영평가는 각 공공기관의 연간 경영실적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위탁한 전문 평가단에 의해 이뤄지는 평가이다. 따라서 경영평가 지침과 영역별 배점은 모든 공공기관에게 평가를 전제로 요구되는 중점 경영방향을 지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종전 별도평가로 이뤄지던 기관장평가가 2018년부터는 기관 평가에 통합됨에 따라 일선 기관에서는 평가 대응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경영평가 지표는 크게 두 가지 주요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관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영관리와 기관별 지표수립이 가능한 주요사업이 그것이다. 첫 번째 범주인 경영관리는 다시 경영전략, 업무효율, 조직 및 인사관리등 6개 항목으로 나뉘어 배점이 부여되며, 항목별 배점은 또다시 비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배점과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배점으로 나뉘는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세부 배점은 다르지만 대체로 비계량 부분의 배점이 높다.

2017년 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평가의 틀과 배점을 규정하는 평가편람에서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구현 평가가 강화된 것이다. 경영관리 범주의 하위 항목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이 신설되어 22점의 배점을 갖게 된 반면 재무관리는 조직, 인사, 재무관리와 통합되어 종전 14점에서 6~9점까지 배점이 축소되었다. 주요사업 범주에도 하위 항목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사업이 공기업의 경우 10~15점, 준정부기관의 경우 이보다 높은 30~35점의 배점을 갖도록 신설되었다. 또한 경영평가의 주요 2개 범주인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외에 별도로 혁신성장 가점평가가 신설되었다.

〈표 II-1〉 2017~2020년 경영평가 지표 및 배점 비교

(단위: 100점 중 배점)

'17년			'18년		
구분	공기업	준정부	구분	공기업	준정부
I. 경영관리	50	50	I. 경영관리	55	45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8	19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2. 업무효율	5	4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20
3.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4	4	3. 업무효율	5	-
4. 재무예산관리	10	10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6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3	13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8
			6. 혁신과 소통	5	5
II. 주요사업	50	50	II. 주요사업	45	55
주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50	50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10~15	30~35
			기타 주요사업	35~40	20~25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19년			'20년		
구분	공기업	준정부	구분	공기업	준정부
I. 경영관리	55	45	I. 경영관리	55	4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2. 사회적 가치 구현	24	22	2. 사회적 가치 구현	24	22
3. 업무효율	5	-	3. 업무효율	5	-
4. 조직·인사·재무관리	7	4	4. 조직·인사·재무관리	7	4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	8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5	8.5
6. 혁신과 소통	5	5	6. 혁신과 소통	4.5	4.5
II. 주요사업	45	55	II. 주요사업	45	5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종합평가	45	5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종합평가	45	55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국회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공공기관'에서 재인용

주: 음영은 주요 변경항목 표시

경영관리 범주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의 하위(세부) 지표를 보면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ESG 지표의 주요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주요사업 범주의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 별도 배점은 2018년 한 해만 시행된 뒤 2019년부터 폐지되었다.

경영평가에서 최근 3~4년간 사회적가치 구현의 강조는 각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이나 윤리경영까지 아우르는 비재무성과를 경영성과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목표설정, 경영추진, 성과 달성 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나. 기관별 ESG 경영 도입 사례

본 소절에서는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경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언론이나 학계, 기관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소개된 ESG 경영체계 수립 사례 및 실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관 유형별로 크게 금융공공기관, SOC공공기관, 에너지기관, 기타 순으로 열거하여 유형내의 공통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기관별 경영 현황으로부터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연금지급을 하기 위해 2021년 말 기준 949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은 그 근거법인 ‘국민연금법’ 제102조에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주체는 투자대상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기금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ESG 평가체계를 반영하여,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매년 2회의 ESG 평가를 실시한다. 기금의 ESG 평가체계는 13개 이슈의 52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각 이슈에 대해 산업별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ESG 점수와 등급을 산출하고 있다.(신왕진, 2021)

〈표 11-2〉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에 대한 ESG 평가체계

	이슈	평가지표
환경	기후변화	온실가스관리시스템,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소비량
	청정생산	청정생산관리시스템, 용수사용량, 화학물질사용량,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폐기물배출량
	친환경 제품개발	친환경 제품개발 활동, 친환경 특허, 친환경제품 인증, 제품 환경성 개선
사회	인적자원관리 및 인권	급여, 복리후생비, 고용증감, 조직문화, 근속연수, 인권, 노동관행
	산업안전	보건안전시스템, 보건안전시스템 인증,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하도급거래	거래대상선정 프로세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협력업체 지원 활동, 하도급법 위반
	제품안전	제품안전시스템, 제품안전시스템 인증, 제품관련 안전사고 발생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공정경쟁 저해행위, 정보보호시스템, 기부금
지배구조	주주의 권리	경영권보호장치, 주주의견 수렴장치, 주주총회 공시시기
	이사회 구성과 활동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 분리, 이사회 구조의 독립성, 이사회의 사외이사 구성현황, 이사회 활동, 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사보수 정책 적정성
	감사제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장기재직 감사(위원)비중, 감사용역비용 대비 비감사용역비용 비중
	관계사위험	순자산 대비 관계사 우발채무 비중, 관계사 매출거래 비중, 관계사 매입거래 비중
	배당	증가/분기배당 근거, 총주주수익률, 최근 3년 내 배당지급, 과소배당

자료: 신왕건(2021) “국민연금의 ESG 투자 Overview”,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발표자료

국민연금이 2015년부터 이러한 자체 평가를 시행함에 따라 투자를 유치 및 유지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도 환경, 사회 등 비재무성과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향후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 한정되던 평가 범위를 확대하여 채권과 대체투자에도 적용하며,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ESG 평가의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남재우, 2021)

(2) 사학연금관리공단⁴⁾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2021년 10월 ESG경영위원회 및 ESG경영 관리 전담부서를

4) 한국공기업학회 2022 동계 학술대회(2022.2.17.) 자료집 및 사학연금공단 보도자료 참고

설치하였고, ESG경영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다. 에너지 절감 등 환경 친화 노력,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권 윤리 경영과 같이 기관경영상의 ESG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분야 기관인 만큼 ESG 투자 강화를 통해 ESG 경영을 실현하고자 한다.

구체적 투자 강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1년부터 협력사에 해당하는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평가시 ESG 추진 노력을 평가 및 점검하고 있다. 국내 PEF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평가요소를 도입하였고, 해외 대체투자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ESG 정책의 적정성 및 외부 평가등급을 확인하였다. 거래 증권사 평가시에도 ESG 활성화 노력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였다. 둘째, ESG 채권투자를 확대하였다. 2021년 녹색채권 1,700억, 지속가능채권 1,000억원 등 총 2,700억을 투자하였다. 셋째, 사회책임투자 즉 SRI유형 투자액을 확대하였다. 2021년 사회책임유형 펀드에 대한 순투자액은 1,500억원, 연말 기준 평가액은 약 4,500억원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주식투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해 수탁자 책임위원회 운영 및 지침 제정 등 수탁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국내주식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강화하여 대상기업수를 2019년 84건에서 2021년 102건까지 확대하였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조직이나 인력 운영 등 기관 경영 전반에 걸친 ESG 경영 추구에도 힘쓰고 있지만 주 사업분야인 기금 운용에서의 ESG 평가에 특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가계재기 지원사업, 기업정상화 지원사업, 공공자산 가치증대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선박금융과 기업회생 지원 등 금융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투자결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2021년 1월 캠코형 ESG 가이드라인 수립에 착수하였다. 이어서 2021년 7월 ESG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한 뒤 같은 해 9월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였다. 추진목표는 “ESG기반의 사회책임경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플랫폼 전환”이며, 환경과 사회,조직 관련 각 추진방향을 ‘저탄소·친환경 공공자산’, ‘사회책임경영 강화’,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정하였다. 3대 추진방향은 다시 1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체화된다.

〈표 II-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ESG 경영전략 및 2021년 성과

추진방향	세부 추진과제	ESG-S 대표 성과지표	2021년	
			목표	성과
저탄소· 친환경 공공자산	도시 저탄소화를 위한 친환경 공공건축 확대	제로에너지빌딩 예비 인증 신청 건수	7건	7건
	제로웨이스트, 업사이클링 등 친환경 기업문화 조성	연간 환경 캠페인 참여 실적	86%	92%
	2040 RE 100, 2030 EV100 실현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전기·수소차 보급 실적	61%	62%
	자회사 친환경 경영 지원	자회사 친환경 제도 공유 실적	2건	2건
사회책임 경영 강화	국민 소통에 기반한 포용적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시효관리심 의위원회 운영 실적	500건	584건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강화	중소기업 국내·해외 판로지원 실적	500개	553개
	지속가능한 안전·인권·정보보호 중심 경영 추진	개인정보 보호관리수준 진단 결과	83.86점	92.83점
	캠페인 뉴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캠페인 뉴딜 지수	100%	108%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지속	직원1인당 봉사시간	10시간	10시간
	일·가정 양립 지원, 역량 개발 등 안정적 인재경영	유연근무 사용률	71%	71.8%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	반부패·청렴 최고의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1등급	3등급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예방적 관리 강화	직무윤리지수	84점	88점
	국민 참여 활성화로 투명 캠페인 실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90점	92.45점
공통	캠페인 ESG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및 지속적인 고도화	ESG 가이드라인 준수 기업지원 투자실적	2,488억원	5,034억원
	ESG경영이행보고서 등 ESG 정보 공개 활성화	경영공시 ESG정보공개 확대	4개 항목	4개 항목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2022), 2021년도 캠페인 ESG 경영이행보고서

캠코는 ESG 경영전략 수립 이후 종전의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ESG 경영이행보고서로 전환하여 2021년 첫 호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2021년 주요 ESG 경영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부문에서 세종 제2국책연구단지, 성남선관위 복합청사 등에 제로에너지 청사 건축 시범사업 제안, 사회부문에서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ESG 경영위원회 운영, 이해충돌방지 인프라 구축등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성과가 반영되어 2021년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한 대한민국 ESG 경영 대상에서 공공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캠코의 ESG 경영이행 보고서상에서 캠코의 주 사업분야와 관련된 세부 ESG 경영 추진 내용으로서 우선 자체적인 ESG 경영 진단모델 개발, 환경부문에서 친환경 공공건축 확대를 위한 제로에너지 빌딩 선도, 인증 취득, 그린 리모델링 추진과 사회부문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시효부담 해방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진 내용에 대해 위 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2021년 목표와 성과를 제시하고 이행강도와 성과의 적정성까지 공개하고 있는 점은 다른 기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4) 한국도로공사⁵⁾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설계 및 건설, 고속도로 유지관리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다. 도로공사는 본업에서 파생한 E/S/S/G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는 각각 E(탄소중립), S(포용), S(안전), G(윤리청렴)을 의미한다.

먼저 환경분야에서는 탄소중립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2050년까지 직접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의무감축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기업활동에 대해 다른 주체가 발생시키는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는 사회적 감축을 통해 2050년 탄소배출량을 50% 수준으로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사업장 안전 분야에서는 2022년부터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망 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교량공사를 현장인력 투입 방식에서 공장제작 및 기계조립 방식으로 전환하고, 추락위험이 높은 가시설에 대한 무인 무게 통제 시스템 적용, 안전확인 센서 적용 등 기술을 활용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통 안전 차원에서

5) 한국공기업학회 2022 동계 학술대회(2022.2.17.) 자료집 참고

2022년까지 OECD 교통안전 상위 5개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휴식 마일리지 운영, 적재불량 단속시스템 고도화를 추진중이다.

포용적 가치 실현 측면에서는 상생경제 실현을 위한 통합기술마켓을 설치(2018.1.)하여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이 도로공사 수요 기술 뿐 아니라 SOC 전반에 걸친 신기술 거래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등록된 기술에 대해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다부처의 자금 지원을 연계하고 있고 2020년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을 109억원 지원받도록 하였다. 또한(자금지원을 받은 기술은) 도로공사에서 의무구매 하도록 하는 등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등록을 신청한 기술에 대해 2021년부터는 ICT 기술로까지 대상과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청렴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조직 내부적으로 윤리특별 T/F 및 윤리경영부 신설, 도공형 부패영향평가 도입, 변호사에 의한 평가 전문성 강화를 시행하였다. 이사회 운영 차원에서도 높은 출석률 유지, 여성임원비율 제고, ESG 위원회 여성위원장 선임 등 전문성과 다양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사례는 SOC 건설·관리라는 업종상의 특성을 극대화하여 사회적가치(S)부분을 안전과 상생의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사업장 관련 안전사고의 최소화를 위한 기술을 발굴해 적용하려는 계획이나, 협력사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의 기술적 상생발전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및 자금지원 조력은 뚜렷하고 의미있는 ESG 경영 추진방향으로 보인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LH)⁶⁾

토지주택공사는 2007년부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온 이력이 있다. UNGC 10대원칙 이행, 지속가능개발목표(SDG)에 부합하는 경영 이행 노력 등을 GRI 기준에 따라 종합적 보고서로 정리,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의 ESG 경영체계는 2020년부터 준비하여 2022년 1월 수립되었다. 사장 직속의 ESG 추진단을 ESG각 부문의 전략목표로는 우선 환경 부문에서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 사회 부문에서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 거버넌스 부문에서 참여·투명경영 거버넌스 구축 확립을 설정하였다.

6) 한국공기업학회 2022 동계 학술대회(2022.2.17.) 자료집 참고

세부 전략과제로 환경분야에서 제로에너지도시·주택 사업 성공적 수행 등 26개 전략과제, 사회분야에서 주거·사회서비스 통합 지원체계 강화 등 35개 전략과제,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분야에서 자율적 청렴 문화 실천 등 31개 전략과제로 총 92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였다.

토지주택공사는 오랜 지속가능경영 이행 노력에 비추어 ESG 경영 전략과제 체계를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탄탄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지만 2022년 5월 현재 경영체계 수립 초기에 있어 사업연계형 ESG 추진과제나 이의 구체적인 이행현황은 아직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표 II-4〉 LH ESG 경영전략 체계

비전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내일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전략목표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 (온실가스 감축 53만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 (주거안정 지원가구 388만호)	누구나 신뢰하는 투명경영 확립 (부패·비리 발생 Zero)
전략방향	Eco LH	Hope LH	Clean LH
	저탄소 녹색도시 확산 제로에너지 주택 선도 청정에너지 사업확대 환경복원·보전 강화	포용적 주거안전망 구축 국민안전, 동반성장 확대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상생 균형발전 강화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공정한 사업체계 마련 건강한 윤리경영 선도
전략과제	제로에너지도시 시범사업 성공적 수행 등 26개 과제	주거·사회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강화 등 35개 과제	자율적 청렴 문화 실천 및 투기방지 등 31개 과제

(6) 인천항만공사⁷⁾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서 컨테이너 전용항만인 인천신항을 운영하고 있다. 항만 공기업 중 최초로 2009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12년부터는 매년 GRI 보고기준에 맞춘 보고서를 펴내는 등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일찍이 파악하고 관련 경영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2021년 10월부터는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ESG 실무추진단, ESG 경영실 등 전담 실무조직을 포함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본격적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1월에는 인천항을 공동관리하는 인천항시설관리센터, 인천항보안공사와 함

7)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내 “ESG경영” 메뉴 내용 참조(접속일: 2022.5.25.)

계 ESG 경영선포식을 치른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인천지역 공공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공공기관간 네트워크 결성을 통해 ESG 경영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경영전략 체계에서는 항만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이라는 비전 하에 친환경 항만 생태계 구현, 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가치 증진, 공정과 신뢰의 지배구조 확립등을 전략방향으로 수립하였고, 미세먼지 저감률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ESG 목표도 설정하였다.

현재까지의 부문별 구체적인 추진성과로는 우선 환경 부문에서 연안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천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도입하였다. 또한 버려지던 냉열에너지를 활용한 LNG 냉열, 냉장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최소 30퍼센트 절약 등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선박, 하역장비등의 전원을 유류보다 탄소배출량이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NG로 전환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조성, 공정경쟁 거래관행 조성,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윤리경영과 반부패청렴 경영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림 II-1〉 인천항만공사 ESG 경영 전략

ESG Vision	항만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 창출					
2030 ESG목표	미세 먼지 저감률 60%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20.8GWh	안전관리 등급 1등급	동반성장 체감도 1등급	종합 청렴도 1등급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
전략방향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친환경 항만 생태계 구현		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가치 증진		공정과 신뢰의 지배구조 확립	
과제 구성	그린뉴딜 기술 기반의 친환경 항만 운영		상호 존중의 인권 문화 확립 개인과 조직이 함께하는 포용적 근로 환경 조성		개방과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체계 전문성 강화	
	항만 에너지 순환 체계 구축으로 탄소 발자국 최소화		선도적 재난·안전 관리로 안심 일터 구현 항만 생태계의 미래 역량 강화 지원		윤리준법경영을 통한 공직 기강 확립	
	참여와 연대의 친환경 문화 확산		고객 중심의 업무 시스템 고도화 소통과 협업 기반의 지역사회 가치 증진		선제·적극적 정보 공개를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	

인천항만공사는 비교적 일찍부터 비재무성과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며 추진체제와 전략을 구체적 목표 및 과제와 맞물려 짜임새 있게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만 시설 운영이라는 공사 주요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대기오염원 배출량이 많은 유류인 만큼 이를 보다 친환경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전이 가능한 여타 공공기관과 달리 지역에 기반한 대규모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기여 및 역내 공공기관과의 연계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내 친환경 문화 확산, 윤리경영 추진 등 구성원의 인식 함양에도 노력하고 있다.

(7)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은 태안을 비롯해 평택, 서인천, 군산 등에서 국내 총 발전용량의 약 8.5%에 해당하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발전공기업이다. 2021년 7월 이사회 내 ESG

위원회 및 ESG 실무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뒤이어 ESG 경영 추진 전략 수립을 통해 환경부문에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사회부문에서는 안전보건·보안관리 강화, 거버넌스에서는 이사회 책임경영 강화 등 분야별로 4개씩 총 12개 추진 방향을 설정해 세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5월 현재 추진된 금년 과제는 환경분야에서 탄소중립추진위원회 발족, 사회분야에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등이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특히 2021년 11월부터 협력사의 ESG 대응 역량 제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SG 평가 결과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등 ESG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협력사인 중소기업들이 인력과 자본 등 부족으로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ESG 역량 강화 세미나 시행 뿐만 아니라 교육자료집 제작, 배포 등 교육과 역량 강화를 시행하는 중이다. 2022년 2월에는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공동으로 실사 및 진단, 컨설팅을 통해 30개 협력사의 ESG 이행 수준과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보고서를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소규모 발전사로서 업무범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협력사의 ESG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이런 구체적인 노력은 향후 정책당국에서 공공기관을 통해 민간의 ESG 경영 역량 제고를 추진하고자 할 때 참고할 만 하다.

(8)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하동, 삼척 화력발전소 및 풍력 등 신재생, 복합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이다. 남부발전은 ESG 경영 비전을 “친환경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정하고, 구체적 지표에 근거한 7대 핵심목표와 12개 KPI를 선정하고 있다.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7대 핵심목표는 환경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7.1GW, 온실가스 감축률 45%, 발전생태계 RE100으로 설정하여 주로 발전사업에서 최선의 온실가스 배출량 축소를 추구하고 있다. 다음 사회부문에서는 중대재해 사고건수 제로, 직접일자리 창출 6,500명, 동반성장 정부평가 최우수등급, 조직문화 만족도 7점 만점 중 6.7점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ESG 투자비중 75% 달성은 2025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여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기관 신뢰도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9) 한국동서발전⁸⁾

한국동서발전은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약 8.0%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 공기업이다. 2021년 4월 창립 20주년을 기하여 ESG 경영을 선포하였다. 6월에는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해 SDG와 연계한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환경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주사업분야와 관련하여 수소혼소가스터빈 국산화 연구개발, 석탄발전소 환경설비 성능개선, 저탄장 옥내화 등 고강도 미세먼지 감축등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ESG 채권(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사후보고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취약계층 태양광설비 지원, 협력기업과의 ESG 경영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ESG 교육 지원, 국내외 판로지원, 구매상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ESG경영포럼 주최 ‘2022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활용한 신재생사업 추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근로자 이사회 참여 확대 등에서 ESG 경영성적을 인정받았다.

(10)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수소 융복합 발전 사업분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발전 공기업이다.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한 발전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주 사업분야가 ESG 경영중에서도 환경부문 및 기후변화 대응 가치 추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대표 홈페이지는 2022년 5월 현재 기업의 핵심가치인 T.R.U.S.T.를 지속가능경영전략 체계로 내세우고 있다. T는 기술(Technology), R은 존중(Respect), U는 안전(Ultimate Safety), S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T는 정도경영(Timeless Integrity)를 각각 의미한다. 한편 홈페이지의 ESG 경영 섹션은 E(친환경경영), S(사회공헌, 사업자지원, 기금사업, 동반성장, 혁신성장), G(윤리경영, 청렴경영) 등 7가지로 구분하여 ESG 관점에서 기업

8) 한국동서발전 보도자료(2022.5.22.) “동서발전, ‘대한민국 ESG경영대상’ 우수기관상 수상” 등 참고

의 사업과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1년 8월 ESG 위원회를 출범하고 ESG 경영체계 구축방안 및 탄소중립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ESG 경영 추진에 돌입한 바 있다. 탄소중립 선도과제는 재생에너지 확대, 청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발전, 혁신형 SMR 개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사업분야 기반 ESG 경영 추진 사례로서 전주시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융합사업이 있다. 민관협업으로 국내 최초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융합사업을 시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및 친환경에너지 신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모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 메탄 65%의 바이오가스를 메탄 95%의 도시가스 수준으로 고질화(高質化) 처리하여 수소 생산과 발전에 연료로 공급하면, 이 연료를 사용하여 연료전지로 발전해 전기 및 수소를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와 수소는 각각 연간 15만 MWh, 200t 용량으로서 사업장 소재지 인근 전주 지역에서 친환경 수소버스 운영, 전력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은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 검사소를 운영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한다. 연간 300만대의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공단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검사장비 구동, 고객대기실 운영 등을 위해 연간 11GW(약 16억원)의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량으로 환산 시 연간 약 5,054톤에 해당한다.

교통안전공단은 ESG에 기반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개발로 ‘에너지 제로 검사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하베스팅이란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서 전력으로 재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먼저 환경적 측면에서는 검사장비를 활용하는 하베스팅 기술 개발, 친환경 에너지 활용한 전기 생산 등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한다. 2021년 말 발표된 계획⁹⁾에 따르면,

9)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2021.12.27.), “한국교통안전공단, 에너지 하베스팅을 활용한 ‘Zero에너지 자동차 검사소’ 구축 착수” 참고

검사장비 중 속도계 장비에서 버려지는 회전 및 정지동력과 매연포집기 환기구에서 발생하는 20m/s의 풍력에너지를 포집하여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고객 대기실 냉난방 등 편의시설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회적 책임 이행 측면에서는 하베스팅 기술 발전을 통해 재활용 전기를 국민에 환원하며, 혁신 기술을 민간에 이전 및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앞선 검사장비 활용 하베스팅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중소기업과 교통안전공단이 공동개발한 에너지 관리 키오스크를 활용하였다.

마지막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관청을 연계하여 중소기업 혁신기술 및 연구지원, 중기부 연계를 통한 구매지원을 추진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검사소당 연 110MW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면 16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며, 이는 1만톤의 탄소 저감에 해당한다. 이를 전국 1,900개 검사장에 적용하면 약 30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사의 사업연계형 ESG 경영 추진 사례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개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사업연계형 사회공헌활동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교육 지원, 교통사고 장애인 운전보조기구 지원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김천혁신도시 내 초등학교에 “교통안전 체험존”을 조성하였고, 이외 입양가족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와 후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37001) 인증 요구사항인 청렴 전담조직 구성, 사업별 부패위험도 평가, 국제 표준 청렴 기준의 규정화, 단위별 개선계획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21년 말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12) 한국보건복지인재원¹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초연결 노인돌봄 서비스 구축 사례를 통해 2022년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1년 노인복지분야 국민기획단 활동으로 발굴된 본 사업은 2021년 기재부가 주최하고 수자원공사가 주관한 K-테스트베드 공모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AI기술을 활용한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터치케어’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이 공공기관 소재 지역사회(청주)내 60여 노인가구에 서비스를 무료 지원할 수

10)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도자료(2022.2.17.)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공기관서비스혁신대상 ESG경영 우수상 수상” 등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 기술에 실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금지원 및 판로개척까지 연계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인재원의 신뢰성 및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 벤처기업의 니즈와 역내 고령인구 재택 돌봄 확대 니즈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사례로서 부각되었다. 인체통신기반 일상생활 정보를 수집하여, AI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실증분석 결과 이용자 건강상태는 6%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긍정적 결과에 바탕하여 벤처기업은 고도화 자금과 인증 및 지자체 판로지원등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다. 소결

우선 바로 앞에서 살펴본 각 공공기관의 ESG 경영 사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요 사업분야의 기술을 친환경 경영 추진에 접목시킨 ESG 우수 경영 사례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소 융복합 사업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제로에너지 청사 건축 시범사업 제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대로 다수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SG 사업활동에는 지역사회 기부 및 공헌활동, 사내 친환경 캠페인 등 사회부문의 활동이 다수 있었다. 둘째, 주요 사업분야가 환경리스크에 직면한 석탄 발전 자회사들은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대체에너지 발전 증대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서부발전의 경우와 같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ESG 확산에 특화하고 있었다. 셋째, 기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비교적 일찍부터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던 기관은 ESG 경영으로의 이행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다. 살펴본 기관 중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 이에 속하였다.

위와 같은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 ESG 경영 관리는 각 기관의 주요사업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사업 분야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 각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며 반면에 안고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지를 진단하여 이에 맞는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II-5〉 기관 유형별 ESG 경영 추진 사례

유형	금융	에너지	SOC	기타
기관	국민연금, 사학연금	서부,남부,동남발전, 한수원 등 한전 발전자회사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교통안전공단	보건복지인재원
고유 사업분야 연관 ESG 추진 사례	ESG 관점의 투자대상 평가	기후변화대응 발전기술 개발 투자	사회적가치 중 안전 강조(도공), 에너지 재활용 기술 개발(교통안전공단)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공통적인 활동	지역사회 기부활동 협력사 대상 ESG 교육,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등			

한편 경영평가 지표 변화 및 비재무성과 중심 경영 사례 확산에 비추어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유사한 성격의 ESG 경영사례 관련 수상이나 대회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시상주체만 하더라도 한국공기업학회, 한국경제신문, ESG 경영포럼 등이 있다. 뚜렷한 차별성 없이 이러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운영되면 각각의 수상이력이나 평가 결과가 경영평가를 비롯한 이후의 다른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자생적인 협회나 단체 차원의 수상 및 시상이 단기적으로 ESG 경영기준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후원을 매개로 한 시상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당국과 각 공공기관 모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III

비재무정보 공시 주요 기준

기관별 경영사례에 앞서 살펴본 비재무정보 공시 확대 논의의 결과, 다양한 관점에서 수립되어온 여러 공시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수립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았다.

공시 기준은 단지 공시된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감사 등의 절차를 규정할 뿐 아니라, 기관이 경영활동을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틀을 정의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공시기준이 수립되면 기관은 그에 맞춰 ESG 활동을 관리하고, 투자자도 그에 맞춰 ESG 성과를 보고 투자할 수 있다.(이병윤, 2022)

이번 장에서는 해외와 국내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E,S,G의 각 영역에 거쳐 어떠한 항목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정립되었던 GRI 기준과 SASB기준 및 우리나라의 K-ESG등을 비교분석하여 지속가능성 공시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요소들을 식별하고, 현재의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해외 공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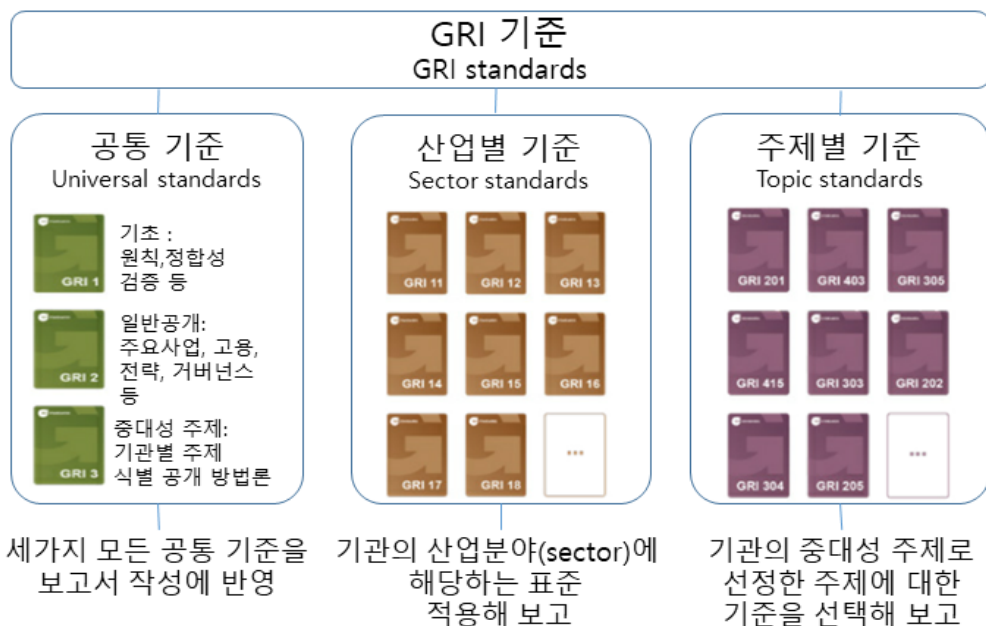
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기준

GRI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 독립단체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글로벌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개하고 있다. 2000년 GRI 가이드라인(G1)을 처음 만들어 발표하였으며 G2~G4의 업데이트를 거쳐 2016년에는 GRI 표준 (GRI Standards)를 발표하였다. GRI의 가이드라인은 비재무정보 공개확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 확대에 대한 세계적 논의를 반영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일례로 공개 항목을 UNGC의 10대 원칙과 연계한다든지 인권경영 현황 공개를 기본공통 표준에 포함시킨다든지 하는 변화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2021년에는 2023년부터 적용할 GRI standards

2021 update를 내놓았다. GRI의 이러한 보고 체계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된 보고 표준의 하나이다.

GRI의 최신(2021년 기준) 표준공개 가이드라인은 상호 연결된 세 가지 표준의 체계로 구성돼 있다.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GRI 공통 표준, 산업별로 적용되는 GRI 산업별 표준, 특정 주제에 대한 공개 기준을 수록하고 있는 GRI 주제별 표준이 그것이다.

〈그림 3-1〉 GRI 표준 체계도



자료: GRI (www.globalreporting.org) 접속일: 2022.5.22.

GRI 보고체계를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는 세가지 영역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바라보면 환경과 사회는 주로 ‘주제별 표준(Topic Standards)’에서 다뤄지고 있고 거버넌스는 주로 모든 기관에 대한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 차원에서는 원재료(Materials), 에너지, 생물다양성 및 공급업체에 대한 환경 평가까지를 공개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에서는 고용,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강제노동 등 조직 내부 피고용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공정

책과의 호응, 고객에 대한 의무(안전, 라벨링) 등 조직 외적인 부분까지를 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중대성 주제(material topics) 후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GRI는 지속가능보고에서 기관이 중대성을 자체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구성하는 절차를 제시한다. 여기서 중대성이란 기관의 운영과 활동이 환경과 사회 등에 어떠한 영향(impact)을 끼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뒤에서 보게 될 SASB 기준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의 장기 재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 III-1〉 ESG 각 영역별 밀접한 중대성 항목

구분		GRI 표준	
주 제 별 기 준	환경 (E)	301 원재료 302 에너지 303 용수와 폐수 304 생물다양성	305 배출 306 폐기물 308 공급업체 환경평가
	사회 (S)	401 고용 402 노사 관계 403 산업안전보건 404 훈련 및 교육 405 다양성과 기회 균등 406 차별금지 407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408 아동노동	409 강제노동 410 보안관행 411 원주민 권리 413 지역사회 414 공급업체 사회 평가 415 공공정책 416 고객보건과 안전 417 라벨링과 마케팅 418 고객개인정보보호
공 통 기 준	거버넌스 (G)	Disclosure 2-9 거버넌스 구조와 구성 2-10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선정과 임명 2-11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위원장 2-12 최고 기구가 영향 관리에 있어서 수행하는 역할 2-13 영향 관리에서 책임의 위임 2-14 최고 기구가 지속가능 보고에서 수행하는 역할	2-15 이해 충돌 2-16 중대 문제에 대한 소통 2-17 최고 기구의 집단적 지식 2-18 최고 기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 2-19 보수 정책 2-20 보수 결정을 위한 절차 2-21 연간 보상비율

자료: GRI (www.globalreporting.org)

주: 환경, 사회, 거버넌스 구분은 저자의 분류에 따르며 GRI는 이와 같은 구분을 제공하지 않음

나. SASB(Sustainable Accounting Standard Board) 기준

GRI 기준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기업의 영향(impact)를 기준으로 중대성 주제를 결정하여 보고하게 하는 방법론을 택하고 있음을 앞 소절에서 살펴보았다. 2011년 설립된 지속가능 회계기준 위원회(Sustainable Accounting Standard Board, 약칭 SASB)는 GRI와 비교해 좀 더 투자자 중심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회계 보고 기준과 호환 가능하면서도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잘 알 수 있는 ESG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자 시도한 기관이다.

SASB가 2021년 6월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으로 통합되었지만, 이들이 최초 제안한 77개 산업별 중대성 지도(materiality map)와 기준은 계속 SASB기준으로 불리며 최근 IFRS가 공개한 국제표준 초안에도 활용되고 있다. SASB는 지속가능성을 크게 다섯가지 차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환경,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리더십과 거버넌스가 그것이다. 각 차원은 ‘온실가스 배출’, ‘인권 및 지역사회 관계’와 같은 세부적 이슈 27개로 구성된다. 아래 표를 통해 SASB 기준이 제시하는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표 Ⅲ-2〉 SASB 기준의 차원과 이슈 구성

차원	이슈
환경	온실가스 배출 대기질 에너지 관리 물 및 폐수 관리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리 생물다양성 영향
사회적 자본	인권 및 지역사회 관계 고객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안 접근성 및 적정가격 제품 품질과 안전 고객 편익 판매가격 및 제품 라벨링(표시)
인적 자본	노사관행 직원 보건 안전 직원 참여, 다양성 및 포용성

차원	이슈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제품 디자인과 수명주기 관리 비즈니스 모델 회복력 공급망 관리 원재료 조달과 효율성 기후변화에 대한 물리적 영향
리더십과 거버넌스	사업 윤리 공정경쟁행위 법적 규제적 환경 관리 중대재해 위험 관리 체계적 위험 관리

자료: SASB 홈페이지(www.sasb.org/standards/materiality-finder 접속일: 2022.5.22.)

다. 국제 지속가능 보고기준 (IFRS S1,S2)

국제회계기준 재단인 IFRS는 지속가능성 공시 국제표준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 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약칭 ISSB)를 산하에 설립하였다. ISSB는 2022년 3월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초안을 내놓고 현재 2022년 7월 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은 IFRS-S1과 S2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는데, 각각 일반요구사항(S1)과 기후 관련 공시(S2)의 주요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ISSB보다 먼저 공시기준의 글로벌 표준 마련을 시도하였던 5개기관 그룹이 기후변화 관련, 즉 E 부분에 대한 공시기준 마련에 최우선순위를 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또한 GRI기준이 일반공개를 포함한 ‘공통기준’에서 보고서 작성 절차, 검증 절차 등을 정의하고 세부 환경 주제별 공시기준인 ‘주제별 기준’에서는 대기나 수질 등 항목별 보고기준이나 단위를 상세하게 정의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라. EU 지속가능 보고기준 (Europe Sustainable Reporting Standard, ESRS)

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독려에 의해 2001년에 설립된 민간 협회이다. EFRAG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재무 보고로서, IFRS기준에서 유럽의 관점을 개발 및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 보고로서, 유럽 위원회를 위해 EU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ESRS) 초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6월 PTF-NFRS(Project task force on Non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가 EFRAG 내에 결성되었으며, EU의 종합적인 지속가능 보고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안하는 최종보고서를 2021년 초 발표하였다.

EU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수립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은 이중중대성(Double-Materiality)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중중대성은 영향(impact) 중대성과 재무 중대성 관점이 상호간의 작용을 무시함 없이, 양자 모두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영향 중대성이란, 각 기관이 자신의 운영이 실제로 잠재적으로 또는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각종 긍정, 부정적 영향 등을 의미한다. 또한 재무 중대성은 양적 또는 질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판단될 수 있고, 기관의 재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의미한다. 사람과 환경에 대한 많은 영향이 이 점에서 ‘재무에 선행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으로 중요해지거나 실현될 수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 이를 ‘중대성의 동학’(dynamic-materiality)’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재무 중대성이 재무 보고를 위한 재무 중대성에서 파생될 수는 없다는 것이 위 TF의 견해이다.

제안된 로드맵에 따라 지속가능 보고 표준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보고 내용의 부문은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국제기구 및 EU의 각 협약과 가이드라인등을 참고하여 향후 하위 주제를 확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표 Ⅲ-3〉 EU 지속가능 보고 표준 수립안

카테고리	하위 주제	구체화 방향
환경(E)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수자원 및 해양자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순환경제 오염	EU Taxonomy에 부합하도록 하위 주제 정의
사회(S)	인력 협력사 고용인 연관 공동체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UNGP의 인권 및 사업 프레임워크, OECD 가이드라인, EU의 사회적 목표와 우선순위 등에 부합하게 정의할 것

카테고리	하위 주제	구체화 방향
거버넌스(G)+	거버넌스 사업과 윤리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의 질 관리 조직과 혁신 평판과 브랜드 관리	종전의 거버넌스보다 넓은 개념

자료: EFRAG(2021) Proposals for a relevant and dynamic EU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setting

마. 세계거래소연맹

증권거래소는 투자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비재무정보 공시 기준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세계거래소연맹은 지속가능성 워킹그룹의 작업을 통해 일찍이 2015년 ESG 공시 가이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항목과 구성은 현재도 유효하게 각 평가·공시기준에서 활용되고 있다.

〈표 III-4〉 세계거래소연맹이 제시한 ESG 공시 핵심지표 매트릭스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	CEO보수 비율	이사회-권한의 분리
탄소 집약도	남성 대비 여성 보수 비율	이사회-비밀표결
직간접 에너지 소비	근로자 이직률	성과연계보수
에너지 집약도	성 다양성	공정노동관행
주 에너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공급업체 행동강령
재생에너지 사용비중	차별 철폐	윤리강령
수자원 관리	부상 발생률	반뇌물/반부패 정책
폐기물 관리	글로벌 보건	조세 투명성
환경 정책	아동노동, 강제노동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환경 영향	인권 정책	지속가능경영 공시프레임
	인권 침해	외부 검증
	이사회-다양성	

바. 주요 국제 기준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기준을 상호 비교한 결과, 환경부분에서는 에너지, 물 및 폐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폐기물 또는 순환경제 등으로 하위 항목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사회부분에서는 인권, 소비자 가치, 직원 안전·보건, 다양성 등을 각 기준간 공통항목으로 볼 수 있지만 기준별 관점과 항목이 매우 다른 것 또한 볼 수 있다. 거버넌스에서도 사업윤리, 공정경쟁 또는 반부패, 지속가능경영에 있어서의 의사

결정 기구(역량, 위임, 역할)등이 공통항목이기는 하나, 최근까지 다듬어져 온 GRI 나 ESRS는 보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5〉 해외 주요 공시기준의 ESG 각 영역별 세부항목

	GRI	SASB	ESRS	세계거래소연맹	공통항목
환경 (E)	원재료 에너지 용수와 폐수 생물다양성 배출 폐기물 공급업체 환경평가	온실가스 배출 대기질 에너지 관리 물 및 폐수 관리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리 생물다양성 영향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수자원 및 해양자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순환경제 오염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 탄소 집약도 직간접 에너지 소비 에너지 집약도 주 에너지원 재생에너지 사용비중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 정책 환경 영향	온실가스배출 에너지 (소비, 집약도, 관리) 수자원 폐기물
사회 (S)	고용 노사 관계 산업안전보건 훈련 및 교육 다양성과 기회 균등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노동 강제노동 보안관행 원주민 권리 지역사회 공급업체 사회 평가 공공정책 고객보건과 안전 라벨링과 마케팅 고객개인정보보 호	인권 및 지역사회 관계 고객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안 접근성 및 적정가격 제품 품질과 안전 고객 편익 판매가격 및 제품 라벨링(표시) 노사관행 직원 보건 안전 직원 참여, 다양성 및 포용성 제품 디자인과 수명주기 관리 비즈니스 모델 회복력 공급망 관리 원재료 조달과 효율성 기후변화에 대한 물리적 영향	인력 협력사 고용인 연관 공동체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CEO보수 비율 남성 대비 여성 보수 비율 근로자 이직률 성 다양성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차별 철폐 부상 발생률 글로벌 보건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권 정책 인권 침해 이사회-다양성	인권 (아동노동, 강제노 동, 차별 금지) 직원 안전, 보건 직원 처우 (보상비율, 훈련 및 교육) 다양성 (성정체성, 인종) 소비자 가치 (라벨링, 제품안전 , 고객개인정보)

	GRI	SASB	ESRS	세계거래소연맹	공통항목
거버 넌스 (G)	거버넌스 구조와 구성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선정과 임명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위원장 최고 기구가 영향 관리에 있어서 수행하는 역할 영향 관리에서 책임의 위임 최고 기구가 지속가능 보고에서 수행하는 역할 이해 충돌 중대 문제에 대한 소통 최고 기구의 집단적 지식 최고 기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 보수 정책 보수 결정을 위한 절차 연간 보상비율	사업 윤리 공정경쟁행위 법적 규제적 환경 관리 중대재해 위험 관리 체계적 위험 관리	거버넌스 사업과 윤리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의 질 관리 조직과 혁신 평판과 브랜드 관리	이사회-권한의 분리 이사회-비밀표결 성과연계보수 공정노동관행 공급업체 행동강령 윤리강령 반뇌물/반부패 정책 조세 투명성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지속가능경영 공시프레임 외부 검증	사업윤리 반부패정책 지속가능 경영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

2 국내 공시기준

가. 한국거래소 정보공개 가이드런스

2021년 1월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에도 비재무정보 공시 요구가 높으며 책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30년까지 전 상장사에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1단계로 자율공시를 2025년까지 활성화하고, 2단계로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하며,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 한다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서 가장 처음 발표된 ESG 정보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ESG공시 의무화 방안 발표와 함께 한국거래소가 2021년 1월 내놓은 ‘정보공개 가이드런스’라고 볼 수 있다. 이 ‘가이드런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등의 이름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기본 원칙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이드런스가 제공하는 권고지표는 조직·환경·사회 3대 분류 아래 2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6〉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런스 공개 권고지표

구분	항목	지표
조직	ESG 대응	경영진의 역할
	ESG 평가	ESG 위험 및 기회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	온실가스 배출	직접 배출량(scope1)
		간접 배출량(scope2)
		배출 집약도
	에너지사용	직접 에너지 사용량
		간접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 집약도
	물 사용	물 사용 총량
	폐기물배출	폐기물 배출 총량
	법규위반 사고	환경 법규 위반 사고

구분	항목	지표
사회	임직원현황	평등 및 다양성
		신규고용 및 이직
		청년인턴 채용
		육아휴직
	안전·보건	산업재해
		제품안전
		표시·광고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공정경쟁	공정경쟁·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나. K-ESG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ESG 공시 규범화가 확대되고, 공급망 실사 등 협력사에 대한 ESG 준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업의 ESG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목표 설정, 실천 방안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산업부 주도로 만들어진 K-ESG 가이드라인이 2021년 12월 발표되었다. K-ESG는 글로벌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기관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ESG요소를 제시함으로써 ESG 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성 제시에 초점을 두었다. 기본 항목 외에도 추가 항목을 제시하여 산업 및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기본 진단 항목을 대체 또는 보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III-7〉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기본항목) 체계

영역	범주	진단항목
정보공시	정보공시 형식	ESG 정보공시 방식
		주기
		범위
	정보공시 내용	ESG 핵심이슈 및 KPI
	정보공시 검증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목표 수립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원부자재 사용량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영역	범주	진단항목
환경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Scope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용수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법/규제 위반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사회	목표	목표 수립 및 공시
	노동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다양성 및 양성평등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률
		장애훈련비
	산업안전	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
	인권	인권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동반성장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협력사 ESG 협약사항
	지역사회	전략적 사회공헌
		구성원 봉사참여
	정보보호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사회 법/규제 위반

영역	범주	진단항목
거버넌스	이사회 구성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
	이사회 활동	전체 이사 출석률
		사내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권리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경영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감사기구	내부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다. 주요 국내 기준 비교

거래소의 정보공개 가이드선스와 산업부의 K-ESG, 그리고 앞 II장에서 살펴보았던 국민연금공단의 투자평가 기준을 비교한 결과 환경 부문에서는 뚜렷하게 온실가스배출량, 폐기물배출, 환경법규 위반 사고 등이 공통된 항목이며, 사회 부문에서는 인권, 산업안전 및 재해, 제품안전, 하도급 또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등이 공통된 이슈로 나타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사회 구성, 주주의 권리, ESG(지속가능경영) 대응 관련 이사회 활동이나 감사 기구 또는 제도 현황을 각 기준이 공통된 중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8〉 국내 주요 공시기준의 ESG 각 영역별 세부항목

	한국거래소 가이드스('21.1.) 21개 권고지표	산업부 K-ESG('21.12.) 27개 범주	국민연금공단 평가기준	공통항목 (2개이상 기준)
환경 (E)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사용 물 사용 폐기물배출 법규위반 사고	환경경영 목표 원부자재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 용수 폐기물 오염물질 환경 법/규제 위반	기후변화 청정생산 친환경제품개발	기후변화 (온실가스배출량) 폐기물배출 법규 위반 사고
사회 (S)	직원 평등 및 다양성 신규고용 및 이직 청년인턴 채용 육아휴직 산업재해 제품안전 표시·광고 개인정보 보호 공정경쟁·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목표 수립 및 공시 노동 다양성 및 양성평등 산업안전 인권 동반성장 지역사회 정보보호 사회 법/규제 위반	인적자원관리 및 인권 산업안전 하도급거래 제품안전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산업안전,재해 제품안전 공정경쟁 개인정보보호 고용 및 노동 하도급·동반성장 인권 (다양성,평등)
거버넌스 (G) 및 기타	ESG 대응 관련 경영진의 역할 ESG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주주권리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ESG 정보공시 방식,주기,범위 ESG 핵심이슈 및 KPI ESG 정보공시 검증	주주의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관계사위험 배당	이사회 구성 주주의 권리 ESG 대응 관련 이사회 활동 감사(기구,제도)

3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과의 비교

현행 통합공시 항목은 41개, 하위 세항목은 98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중 ESG관점의 공시항목, 즉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관련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2021년 이전, 2021년 공시추가항목, 2022년 공시추가항목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먼저 2021년 이전부터 통합공시 대상이었던 항목들 중에는 22개 세항목을 ESG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내용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사회회의록, 노동조합관련현황이나, 육아휴직·출산휴가 활용현황 등 일가정양립제도 활용 지표들이 있다.

2021년 통합공시항목에는 11개의 ESG 항목이 추가된 바 있다. 2021년 항목번호 기준으로 16. 일·가정 양립 지원, 17. 안전 및 환경, 18. 사회공헌활동 항목이 추가되었다. 세항목 기준으로는 4개(가족돌봄 휴가·휴직)가 일·가정 양립 지원 항목 내의 세항목으로 추가되었고 3개(안전경영책임보고서, 녹색제품 구매 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가 17. 안전 및 환경 내에 추가되었으며, 2개(봉사 실적, 기부실적)이 18. 사회공헌활동 내에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2개 항목(혁신조달 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기존 40. 계약실적 항목 내에 세항목으로 추가되었다.

2022년에는 통합공시 항목 4개가 ESG 항목으로서 신설되었다. 12. 환경보호, 14. 인권경영, 36. 동반성장 평가 결과, 37. 청렴도 평가가 그것이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는 추가된 항목을 10개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세항목 단위로 집계한 결과이다. 종전에 있던 11.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항목 내에 중분류 1개 항목(개인정보보호)이 추가되었으며, 신설된 12. 환경보호 항목에 5개 세항목(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환경법규 위반 현황)이 추가되었고, 27. 감사보고서 항목내에 1개 세항목(내부감사부서 설치 현황)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항목 중 인권경영, 동반성장, 청렴도 평가는 별도 세항목이 없으므로 총 10개로 집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통합공시에는 세항목 기준 43개의 ESG 공시항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기존 공시되어온 성별 임직원수나 임원연봉과 직원 평균보수 정보간 관계를 통해 다양성 관련 공시항목인 임원 성비, 노동 관련 공시항목인 보상배율(임원연봉/직원평균보수)도 산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이전부터

공시되어오던 항목 중 기관장 업무추진비, 임원 국외출장 내역, 감사원 지적사항, 법인세 납세정보, 공개입찰, 수의계약 정보 등도 거버넌스에 관계된 ESG 항목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청렴도 평가시 이러한 요인들이 고려된다고 볼 수 있어 중복의 여지가 있으며, 일정한 기준 대비 위반 또는 준수 여부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항목들의 존재까지 고려하면 현재 통합공시 세항목의 50%이상이 ESG 공시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Ⅲ-9〉 통합공시 항목 및 ESG 관련 세항목 현황

항 목		ESG 관련 세항목
1. 일반현황		
2. 임직원 수		
3. 임원현황		
4. 신규채용 현황		기존항목, 사회(S)
5. 임직원 채용정보		
6. 임원연봉		
7. 직원 평균보수		
8. 기관장 업무추진비		
9. 복리후생비		
10.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 운영현황(휴가/휴직 등)		
11.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안전경영책임보고서	2021추가, 사회(S)
	개인정보보호	2022추가, 사회(S)
12.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2021추가, 환경(E)
	에너지, 폐기물 등	2022추가, 환경(E)
		(에너지, 폐기물, 용수3개 세항목)
	환경법규 위반	2022추가, 환경(E)
	저공해 자동차 등	2022추가, 환경(E)
	녹색구매실적	2021추가, 환경(E)
13. 사회공헌활동(봉사활동, 기부실적)		2021추가, 사회(S) 2개 세항목
14. 인권경영		2022추가, 사회(S)
15. 이사회 회의록		기존항목, 거버넌스(G)
16. 알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육아휴직, 유연근무, 가족돌봄휴직 등	사회(S) 기존세항목 9개 2021추가 4개세항목
17. 임원 국외출장 내역		

항 목		ESG 관련 세항목
18. 노동조합 관련현황	가입정보 등	기존항목, 사회(S) 4개 세항목
	단체협약 등	
19. 내부규정		
20. 징계현황	제도운영현황	기존항목, 사회(S)
	징계처분 결과	기존항목, 사회(S)
21.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기존항목, 사회(S)
22. 요약 재무상태표	공기업 외	
	공기업	
23. 요약 손익계산서	공기업 외	
	공기업	
24. 수입 · 지출현황		
25. 자본금 및 주주현황		기존항목, 거버넌스(G)
26. 장단기 차입금현황	공기업 외	
	공기업	
27. 감사보고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기존항목, 거버넌스(G)
	내외부감사결과	기존항목, 거버넌스(G)
	자체 감사부서 현황	2022추가, 거버넌스(G)
28. 납세정보	법인세	
	세무확정내역 등	
29. 주요사업		
30. 투자집행내역		
31.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투 · 출자 현황 등	
	재취업 현황 등(임원)	
	재취업 현황 등(직원)	
	대규모 거래내역	
	연간 주요거래내역	
	신규 시설투자	
	출연	
32. 경영부담 비용추계	담보제공 현황 등	
	기타 사항	
33.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4. 12개 주요기관 상세부채 정보		
35. 경영 평가 결과	경영실적 평가결과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36. 동반성장 평가결과		2022추가, 사회(S)
37. 청렴도 평가		2022추가, 거버넌스(G)

항 목		ESG 관련 세항목
38. 국회 등 외부평가	국회,감사원 지적 등	
	경평 지적사항	
3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기존항목, 사회(S)
40. 계약정보	공개입찰정보	
	수계약	
	혁신조달구매실적,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2022추가, 사회(S) 2개 세항목 (혁신,장애인)
41. 연구보고서		

통합공시 항목을 국내외 주요 기준의 공통사항과 비교했을 때 여러 기준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항목은 현행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측면은 다양성보장정책, 아동노동, 제품표시 등이다.

〈표 Ⅲ-10〉 국내외 주요 ESG 공시 공통항목과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비교

	해외	국내	공공기관 통합공시상의 ESG 공시 항목
환경	온실가스배출 에너지 (소비,집약도,관리) 수자원 폐기물	기후변화 (온실가스배출량) 폐기물배출 법규 위반 사고	온실가스 에너지사용 폐기물 물사용 환경법규위반사항 친환경차 의무구매제 녹색제품구매실적
사회	인권 (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 금지) 다양성 (성정체성,인종) 직원 안전,보건 직원 처우 (보상비율,훈련 및 교육) 소비자 가치 (라벨링,제품안전, 고객개인정보)	인권 (다양성,평등) 산업안전,재해 고용 및 노동 제품안전 개인정보보호 하도급·동반성장 공정경쟁 징계현황	인권경영현황 노동조합 관련현황 다양성(여성비율) 정보보호수준진단결과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일가정 양립관련 휴가 및 휴직 현황 공정거래 동반성장평가결과 봉사·기부 실적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혁신구매실적 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

	해외	국내	공공기관 통합공시상의 ESG 공시 항목
거버넌스	사업윤리 반부패정책 지속가능 경영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	이사회 구성 주주의 권리 ESG 대응 관련 이사회 활동 감사(기구,제도)	이사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내부부서,전문성) 자본금 및 주주현황 청렴도평가결과

즉 국내외 ESG 지표체계가 중시하는 항목들을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이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통합공시에서 ESG 공시항목의 확장을 모색하고자 할 때에는, ESG기준이 대부분 생산·판매 기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통합공시 항목 적용대상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공공기관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포함된 지표가 공시 목적을 충분히 또는 올바르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이미 포함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추가 공시항목을 포함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용수 사용량은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항목 공시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 재활용수 사용량이나 재활용수 사용 비율 등의 상세 내역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부문과 민간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거버넌스 공시의 초점이 민간기업처럼 주주권리 보장 및 이사회투명한 운영에 맞춰지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경영진 구성과 내부통제 제도가 상당부분 법규와 주무부처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중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시항목의 수가 타 부분에 비해 적고 그 내용도 표준화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거버넌스 부분의 추가 통합공시 항목을 고려한다면 향후 시행될 예정인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도입 현황, 현재 공시되는 지표를 2차 가공한 보상배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ESG경영에서의 역할 등 소수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공공기관 ESG 공시 내용 분석

1 분석의 개요

본 장에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ESG 공시 항목 중 통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항목 12개의 실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 각 분야의 주요 항목에서 평균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수준과 연도별 추이를 알아보고 기관 그룹별로 경영 실적이 특히 뛰어나거나 반대로 미진한 ESG 영역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상항목은 12개로 주로 통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항목들이며, 2021년도 및 2022년도에 추가된 항목들과 2021년 이전부터 공시되었던 임직원 관련 항목을 기반으로 재계산한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다. 2021년과 2022년 ESG 관점의 통합공시 항목 개편시 추가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은 첨부파일이나 텍스트 형태로 공시됨에 따라 통계형태로 활용하기 어려운데, 봉사실적, 직장어린이집현황, 환경법규 위반 현황, 인권 경영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ESG 항목 중 2분기 공시 항목(7월 입력, 공개) 대다수의 자료는 보고서 작성시점('22년 5월) 현재 미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상태인 항목 및 타 경로로 공개된 항목에 대해서만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 타 경로란 환경부가 집계, 발표하는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나 국민권익위 시행 청렴도 평가 결과처럼, 타 부처를 통해 집계 또는 발표되는 실적이 추후 통합공시에도 등록되어 공개되는 항목을 말한다. 현재 이용 불가능한 통계항목이 사회 분야가 많음에 따라 분석된 결과가 환경 측면에 편중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후에서 제시되는 기관별 성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뒤이은 분석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기관 설립근거나 규모에 관련된 구분은 '분류'로 칭하고, SOC나 금융 등 공공기관의 성격과 주된 사업분야에 따른 구분은 '유형'으로 칭하고자 한다. 분류는 자료 발표 시점의 공공기관 분류를 따르고, 유형은 2022

년 5월 기준 ‘알리오플러스’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9종 기관유형에 따라 속성값을 부여하였다. 에너지, 금융, SOC, 연구교육, 산업진흥정보화, 문화예술외교, 농림수산 환경, 고용보건복지, 기타가 9개 유형이다. 2022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된 예탁결제원의 경우 금융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아시아문화원의 경우 문화예술외교 기관으로 보았다. 분류별, 유형별 기관 그룹은 보고서 말미 부표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소절은 환경-사회-거버넌스 각 분야별 대상 공시항목의 기관별 실적을 기관 분류별, 유형별, 연도별 평균으로 나타내고 최근연도에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기관을 일람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각 ESG 항목에서 기관들이 평균적으로 도달하고 있는 수준과 더불어 특정 그룹의 기관이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어떠한 공시항목에서 공공기관들이 성과 창출에 탁월하거나 또는 대체로 미진한지 등 현황을 파악하여 공공기관 관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IV-1〉 분석대상 ESG 항목

영역	공시항목	대상기관수	대상연도	공개일자	자료출처
E 환경	1) 녹색구매비율	337	2020	2021.7.	알리오 및 환경부
	2) 온실가스 감축률	259	2020	2021.10.	알리오
	3) 저공해 자동차 현황	185	2020	2021.5.	알리오 및 환경부
S 사회	4) 혁신구매액	147	2020	2021.7.	알리오
	5) 기부 실적	351	2016~2020	2021.7.	알리오
	6) 중증장애인 생산물 구매액	364	2019~2020	2021.7.	알리오
	7) 산업재해·안전사고 사망자 수	366	2016~2020	2021.4.	알리오
	8) 동반성장 평가결과	133	2021	2022.4.	중소벤처 기업부
	9)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	350	2021	2022.2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G 거버 넌스	10) 청렴도 평가결과	132	2021	2021.12.	국민권익 위원회
	11) 이사회 여성 비율	370	2017~2021	2022.4.	알리오
	12) 직원 평균 보수 대비 상임 임원 평균 보수	355	2017~2021	2022.4.	알리오

가. 녹색제품 구매 실적

2021년도부터 공시항목에 추가된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법률” 제도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시하는 것이다. 2분기 공시항목임에 따라 알리오에는 2022년 5월 기준 한해 (2020년 실적) 만이 게시되어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총구매액과 녹색제품 구매액, 녹색제품 구매액의 총 구매액 대비 비율 이렇게 세가지를 공개하게 된다.¹¹⁾ 여기서는 녹색제품 구매액과 총구매액 대비 비율을 중심으로 기관분류별,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다.

환경부는 중앙공공기관 340곳의 실적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 2021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된 건설관리공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이하의 분류별, 유형별 분석에서 제외하고 33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공기관의 녹색구매액 합계는 6,933억원으로 집계되며 총 구매액 대비 녹색구매액의 평균 비율은 83.3%이다. 기관분류별로 보면 시장형 공기업의 녹색구매 비율이 가장 높고 금액으로는 준시장형 공기업의 기관당 구매액이 172억원대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기타공공기관은 평균 금액도 가장 낮은 2,256만원이며 총구매액 대비 비율도 61.0%로 가장 낮다.

〈표 IV-2〉 공공기관 분류별 녹색구매액(2020년)

(단위: 백만원)

	기관 수 (A,개)	총구매액 (B)	녹색구매금액 (C)	구매비율 (C/B,%)	기관당 구매액(C/A)
공기업(시장형)	16	100,372	94,690	94.3	5,918
공기업(준시장형)	20	401,529	344,128	85.7	17,206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	27,065	23,180	85.6	1,783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82	227,564	185,032	81.3	2,256
기타공공기관	207	75,741	46,230	61.0	223
총합계	338	832,271	693,260	83.3	2,057

11) 그러나 2021년 실적부터는 총구매액 정보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고, 녹색구매액과 전년대비 증가분만을 보고, 공개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다음으로 기관유형별 실적을 보면, 기관당 평균금액은 SOC 기관이 163억원으로 높고 비율은 에너지 기관이 90.9%로 가장 높다. 문화예술외교, 기타, 연구교육 순으로 기관당 평균 금액이 가장 낮으며 녹색구매 비율 또한 70%대로 낮은 편이다.

〈표 IV-3〉 공공기관 유형별 녹색구매액(2020년)

(단위:백만원)

	기관 수 (A,개)	총구매액 (B)	녹색구매금액 (C)	구매비율 (C/B,%)	기관당 구매액(C/A)
SOC	23	437,634	375,330	85.8	16,319
고용보전복지	48	48,916	40,945	83.7	853
금융	19	21,363	15,807	74.0	832
농림수산환경	23	141,375	108,512	76.8	4,718
문화예술외교	40	12,210	9,806	80.3	245
산업진흥정보화	33	15,421	13,221	85.7	401
에너지	29	100,299	91,188	90.9	3,144
연구교육	82	39,550	26,474	66.9	323
기타	41	15,503	11,977	77.3	292
총합계	338	832,271	693,260	83.3	2,057

마지막으로 기관별 녹색구매액과 비율 상, 하위 기관을 보면 토지주택공사가 2,667억원(86%)로 가장 컸고 예산규모가 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들이 대부분 수위를 차지했으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농어촌공사도 우수한 실적을 보인다. 한편 구매액이 0원인 기관도 16개에 달하여 큰 편차를 나타낸다.

녹색구매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은 23개 기관, 90%대를 달성한 기관은 91개 기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지표임을 알 수 있다.

〈표 IV-4〉 녹색구매액 상위 10개 기관

순위	기관명	구매액	녹색구매 비율(%)
1	한국토지주택공사	266,694	86.4
2	한국농어촌공사	57,154	70.4
3	한국환경공단	41,188	87.4
4	한국수자원공사	37,760	81.2
5	한국수력원자력(주)	25,846	96.7
6	한국전력공사	24,147	94.2
7	한국도로공사	17,679	83.0
8	국가철도공단	16,897	86.0
9	국민건강보험공단	9,301	88.9
10	학교법인한국폴리텍	8,578	82.6

나. 온실가스 감축률

2020년에 통합공시 항목으로 지정된 온실가스 감축률의 공개대상 기관수는 배출권 거래제 의무적용기관등을 제외하기 때문에 295개로 제한적이다. 공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한국전력 및 유관 발전 자회사들과 가스공사 등이 제외되므로 온실가스 감축률 정보가 알리오를 통해 공시되는 시장형 공기업 3곳은 부산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이다.

감축률은 2019년보다 2020년 상승하여 적용대상 기관들이 평균적으로 감축량을 늘리는 추세가 나타난다. 30%대를 기록한 타 기관들 대비 기타공공기관의 감축률은 26.7%로 대체로 낮은편이다.

다음으로 기관유형별 실적을 보면, 산업진흥정보화 유형의 기관이 2020년 가장 높은 감축률 40.7%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에너지기관이 35.1%를 기록했음을 볼 수 있다. 유일하게 SOC기관만 평균 감축률이 2019년 24.1%에서 2020년 20.4%로 하락하는데, 이는 코레일로지스(주)가 2020년 -78%를 기록한 데 따른다.

〈표 IV-5〉 기관 분류별 온실가스 감축률 현황

	기관 수 (개)	감축률 평균(%)		
		2019년	2020년	증감(%p)
공기업(시장형)	3	32.0	36.7	4.7
공기업(준시장형)	13	30.8	36.5	5.7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	33.7	38.0	4.3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82	25.1	32.7	7.6
기타공공기관	184	19.6	26.7	7.1
총합계	295	22.4	29.4	7.0

〈표 IV-6〉 기관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률 현황

	기관 수 (개)	감축률 평균(%)		
		2019년	2020년	증감(%p)
SOC	15	24.1	20.4	-3.7
고용보전복지	38	12.4	20.9	8.5
금융	18	27.8	33.1	5.3
농림수산환경	23	21.1	26.0	4.9
문화예술외교	37	22.8	34.7	11.9
산업진흥정보화	34	31.1	40.7	9.6
에너지	17	29.8	35.1	5.3
연구교육	72	21.5	28.6	7.1
기타	41	20.0	25.8	5.8
총합계	295	22.4	29.4	7

마지막으로 기관별 감축률을 보면 과학기술일자리 진흥원이 100%로 1위, 한국영상자료원이 9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96% 등으로 높은 감축률을 나타냈다.

〈표 IV-7〉 2020년 온실가스 감축률 상위 10대 기관

순위	기관명	감축율(%)
1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100.0
2	한국영상자료원	97.0
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96.0
4	세종학당재단	86.0
5	국립박물관문화재단	85.0
6	한국원자력안전재단	82.0
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82.0
8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81.0
9	국방전직교육원	80.0
10	한국과학창의재단	78.0

다. 저공해 자동차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6년부터 『친환경자동차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공동 시행중이며,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저공해자동차 구매 임차 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제58조의6 및 58조의 7)

의무구매충족여부는 구매한 자동차 실적에 의거, 환산계수를 적용해 계산식으로 산출한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환산계수는 『친환경자동차법』(이하 법)상 분류에 따라 1종(전기·태양광 및 수소전기자동차), 2종(하이브리드자동차), 3종(저공해차 배출기준에 맞는 LPG, 휘발유차 등)등으로 구분하며 승용자동차와 승용차가 아닌 경우도 구분하여 상이한 환산계수를 적용한다. 해당연도 구매·임차 차량을 모두 2종 이상으로 도입하는 경우 구매비율이 100%로 산출되게 된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중 6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기관으로, 해당연도 의무구매제 적용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이며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18의2 ②에 해당하는 대상 기관은 제외되는데, 제외요건은 첫째, 해당연도 업무용차량 보유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둘째, 승합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셋째, 화물운송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비적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다.

환경부는 2020년 말 기준 보유 현황과 2020년 중 구매실적을 환경부 누리집 사전정

보공표 메뉴를 통해 2021년 5월 공개한 바 있다.

2020년 실적 공개에 따르면 186개 공공기관이 대상기간 중 4,663대를 구매하였으며 이중 저공해차는 2,594대, 제외산정시 제외대상 차량은 1,782대였다. 아래 표에서는 186개 기관 중 2021년 지정해제된 건설관리공사를 제외한 1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건설관리공사(주)는 2020년 총 12대를 구매하였으며 제외대상차량이 11대, 저공해차는 1대를 구매하였다.

〈표 IV-8〉 기관 분류별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2020년)

(단위: 대)

	대상기관	전체	저공해차 소계	일반차량	제외차량
공기업(시장형)	16	771	429	24	318
공기업(준시장형)	20	1,105	468	16	621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2	314	189	109	16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55	1,226	519	63	644
기타공공기관	82	1,235	988	64	183
총합계	185	4,651	2,593	276	1,782

달성 또는 미달성여부에 따라 기관을 집계한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총 185개 기관 중 의무구매제를 준수한 기관은 130개로 70.3%에 해당한다. 미달성기관은 35개로 19%가량을 차지한다. 대상기관 선정시에 차량 구매·임차 계획이 있어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구매실적이 없는 기관도 10%가량인 19곳 있다.

미달성기관의 유형별, 분류별 분포를 보면 에너지영역 공기업에서 4곳, 연구교육영역의 기타공공기관에서 7곳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표 IV-9〉 기관 분류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기관 수 (2020년 기준)

(단위: 개)

	대상기관	달성	미달성	구매실적없음	달성기관 비율
공기업(시장형)	16	14	2	-	87.5%
공기업(준시장형)	20	17	2	1	85.0%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2	6	6	-	50.0%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55	42	10	3	76.4%
기타공공기관	82	51	15	16	62.2%
총합계	185	130	35	19	70.3%

저공해차 구매 임차 대수가 많은 상위 10개 기관을 살펴보면 금융분야 3곳, 에너지 분야 3곳, 환경분야 2곳, SOC분야 2곳 등이 고르게 분포한 것을 볼 수 있다. 달성률이 100%를 초과한 상위 10개 기관을 살펴보면 공기업 5개 기관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분야별로는 에너지 3곳 고용보건복지 2곳, SOC 2곳, 문화예술외교 및 금융, 기타 분야의 기관이 포함되었다.

〈표 IV-10〉 구매 및 임차 대수별, 달성률별 상위 10개 기관

대수 순위	기관명	구매임차 대수	달성률 순위	기관명	달성률 (%)
1	중소기업은행	597	1	(재)우체국물류지원단	152.5
2	한국전력공사	256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0
3	한국도로공사	147	3	서울대학교병원	150
4	한국환경공단	100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50
5	신용보증기금	99	5	(주)강원랜드	140
6	한국산업은행	93	6	인천국제공항공사	130
7	한국수자원공사	90	7	서민금융진흥원	120
8	한국토지주택공사	87	8	한국동서발전(주)	118.3
9	환경보건협회	85	9	한국중부발전(주)	113.8
10	한전KDN	60	10	한국서부발전(주)	112.5

가. 혁신구매액

기획재정부는 혁신구매목표제를 통해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한 금액 또는 혁신지향 공공구매액을 합산한 금액을 2021년도부터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혁신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 제품(「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근거)을 말하며, 혁신지향 공공구매액은 혁신제품 이외 기타 혁신성·공공성이 높은 제품중 평가단에 의해 인정된 구매 실적을 말한다.

혁신조달 중소기업과 공공기관간의 상생협력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항목은 사회부문 공시항목으로 볼 수 있다. 본 소절에서는 2021년 7월말 알리오를 통해 공시되었던 기관들의 2020년 12월말 기준 혁신조달실적을 기관분류별, 유형별로 분석한다.

147개 기관이 총 1,901억원의 혁신구매실적을 공시하였으며, 시장형 공기업의 혁신구매액이 1,2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1천9백만원의 혁신구매액을 공시하였다.

〈표 IV-11〉 기관 분류별 혁신구매 실적

(단위: 백만원)

	기관 수	혁신구매금액
공기업(시장형)	16	121,841
공기업(준시장형)	20	50,755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	19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32	16,871
기타공공기관	78	621
총합계	147	190,107

기관 분류별, 유형별로 혁신구매액을 나누어 보면 준시장형 SOC 공기업과 시장형 에너지 공기업이 혁신구매 총액에 기여분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2〉 기관 분류별, 유형별 혁신구매액 현황

(단위: 백만원)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기타 공공기관	총합계
SOC	858	48,764		16,283	0	65,905
고용보건복지				134	0	134
금융		6	19		13	38
농림수산환경		301		8	0	309
문화예술외교	14	0		70	211	295
산업진흥정보화				230	12	262
에너지	120,969	1,684		143	0	122,776
연구교육				3	370	373
기타		0		0	15	15
총합계	121,841	50,755	19	16,871	621	190,107

기관별 금액을 보면, 구매실적이 없는 기관이 147개 기관 중 91개 기관을 차지한다. 즉 56개 기관만이 백만원 이상의 혁신구매액을 보고한 것이다. 구매액 상위 기관은 주로 에너지·SOC 부문의 공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1위~10위 기관의 구매액 합계는 1,789억원으로 전체 기관 합계 1,901억원의 94%에 달하는 등, 구매액 분포는 상위 기관에의 집중도가 높다.

〈표 IV-13〉 혁신구매실적 상위 10개 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기관명	기관분류	기관유형	구매액
1	한국전력공사	공기업(시장형)	에너지	90,588
2	한국철도공사	공기업(준시장형)	SOC	30,247
3	국가철도공단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SOC	16,122
4	한국수자원공사	공기업(준시장형)	SOC	8,539
5	한국남부발전(주)	공기업(시장형)	에너지	8,214
6	한국수력원자력(주)	공기업(시장형)	에너지	5,795
7	한국중부발전(주)	공기업(시장형)	에너지	5,499
8	한국도로공사	공기업(준시장형)	SOC	5,048
9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준시장형)	SOC	4,476
10	한국동서발전(주)	공기업(시장형)	에너지	4,406

나. 기부 실적

통합공시제도는 2021년부터 종전의 ‘증여’ 항목을 ‘기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직전년도 실적을 매년 7월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요건을 만족하는 기부액은 기관 명의로 연간 기부한 총 금액이며, 날짜와 수령인을 포함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본 소절에서는 14개 부설기관을 포함한 350개 기관의 2016년~2020년 기부실적을 분석하였다. 직전 5년간의 기부금액 추이를 보면 2016년 2,321억원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962억원을 기록하였고 코로나의 영향 등으로 2020년에는 이보다 소폭 감소한 3,618억원의 기부가 이뤄졌다. 기부금액 감소는 주로 준시장형 공기업(1,368억원→1,242억원, 126억원 감소)과 기타공공기관(1,154억원→794억원, 360억원 감소)에서 발생하였다.

〈표 IV-14〉 기관 분류별 기부 현황

(단위: 억원)

	기관수 (개)	기부금액				
		2016	2017	2018	2019	2020
공기업(시장형)	16	899	1,138	1,088	1,242	1,381
공기업(준시장형)	20	792	924	950	1,368	1,242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	68	79	87	89	95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83	76	87	89	109	106
기타공공기관	218	485	576	890	1,154	794
총합계	350	2,321	2,805	3,104	3,962	3,618

이를 다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로 SOC, 에너지, 금융, 문화예술외교 순으로 기부금액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2020년 금융 기관의 기부가 약 300억원 감소하였으나 에너지기관의 기부는 비슷한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5〉 기관 유형별 기부금액

(단위: 개, 억원)

	기관수	기부금액				
		2016	2017	2018	2019	2020
SOC	23	545	744	682	1,076	957
고용보건복지	47	152	178	160	163	174
금융	19	343	414	762	1,078	696
농림수산환경	23	179	184	155	163	110
문화예술외교	39	331	240	450	399	377
산업진흥정보화	34	18	18	19	16	23
에너지	26	582	815	623	755	1,012
연구교육	94	76	80	83	88	113
기타	45	95	132	169	224	156
총합계	351	2,321	2,805	3,103	3,962	3,618

2020년 기준 기부금액 최고를 기록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332억원을 기부하였고, 기부금액이 아예 없는 기관도 350곳 중 49곳이 있었다. 2020년 기부금액 기준 상위 10개 기관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16〉 기부 금액 상위 10개 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기관명	기부금액
1	한국철도공사	33,228
2	(주)강원랜드	29,454
3	중소기업은행	26,685
4	한국도로공사	20,136
5	한국가스공사	17,401
6	한국서부발전(주)	16,710
7	한국토지주택공사	16,138
8	한국산업은행	14,803
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2,634
10	인천국제공항공사	12,444

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역시 2021년부터 공시항목에 신설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시설 및 단체를 지정하고 공공부문이 이로부터 구매한 실적을 집계, 발표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공시항목은 이에 해당하는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통합공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2021년 4분기 공시 기준 2019년과 2020년 구매 실적에 대한 기관별 통계가 존재하며, 총 364개 기관이 2019년에는 2,904억원을, 2020년에는 3,063억원을 구매하였다.

〈표 IV-17〉 기관 분류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실적

(단위: 백만원)

	기관 수 (개)	구매금액		
		2019 (A)	2020 (B)	증감 (B-A)
공기업(시장형)	16	81,852	72,496	-9,356
공기업(준시장형)	20	97,278	106,557	9,279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	10,115	8,478	-1,637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85	69,497	74,666	5,169
기타공공기관	230	31,678	44,141	12,463
총합계	364	290,420	306,338	15,918

유형별로 SOC 기관과 에너지 기관의 구매금액이 크고 다음 농림수산환경, 고용보 건복지 순이다. 앞서 살펴 본 혁신조달실적과 동일하게 SOC기관 및 에너지 기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부실적과는 다르게 금융부문의 비중이 낮다.

〈표 IV-18〉 기관 유형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실적

(단위: 백만원)

	기관 수	구매금액		
		2019 (A)	2020 (B)	증감 (B-A)
SOC	23	110,170	120,333	10,163
고용보전복지	48	22,638	21,681	-957
금융	19	5,264	5,637	373
농림수산환경	23	39,916	38,012	-1,904
문화예술외교	41	14,798	20,579	5,781
산업진흥정보화	36	10,532	11,014	482
에너지	27	68,664	67,890	-774
연구교육	100	10,107	13,287	3,180
기타	47	8,331	7,905	-426
총합계	364	290,420	306,338	15,918

〈표 IV-19〉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상위 10개 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기관명	구매금액
1	한국토지주택공사	39,757
2	한국도로공사	38,228
3	한국농어촌공사	23,150
4	세종학당재단	13,530
5	한국전력공사	13,350
6	한국수력원자력(주)	11,845
7	한국수자원공사	11,551
8	한국동서발전(주)	11,328
9	국가철도공단	9,212
10	한국환경공단	6,471

라. 산업재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

2021년부터 안전경영보고서가 공시항목에 추가되었으며 알리오 사이트는 안전경영보고서 중 산업재해 사망자수 및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통계로 제시하고 있다. 본 소절에서는 산업재해와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자수 합계를 중심으로 기관별 현황을 분석해 본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관은 36개 기관이다. 한국 전력공사가 39명, 토지주택공사가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추이는 2017년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 크게 감소하였다가 2020년 1건 늘어났다.

〈표 IV-20〉 기관분류별 산업재해·안전사고 사망자 수

(단위: 명)

	기관수 (개)	산업재해·안전사고 사망자 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6~'20합계
공기업(시장형)	16	16	15	20	6	14	71
공기업(준시장형)	20	26	23	22	18	13	102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	1	1	2	3	1	8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87	0	1	0	0	0	1
기타공공기관	230	11	18	8	7	7	51
총합계	366	54	58	52	34	35	233

〈표 IV-21〉 사망자 수 누계 상위 10개 기관

(단위: 명)

기관명	분류	유형	산업재해·안전사고 사망자 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6~'20 합계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시장형)	에너지	5	10	12	4	8	39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준시장형)	SOC	7	9	9	4	6	35
국가철도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SOC	6	9	2	3	3	23
한국도로공사	공기업 (준시장형)	SOC	3	3	6	6	5	23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준시장형)	SOC	8	6	2	2	1	19
한국농어촌공사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농림수산 환경	1	5	6	1	3	16
한국수자원공사	공기업 (준시장형)	SOC	4	1	3	2	0	10
대한석탄공사	공기업 (준시장형)	에너지	2	3	0	3	1	9
한국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농림수산 환경	2	1	0	2	1	6
한국수력원자력(주)	공기업 (시장형)	에너지	1	2	1	0	1	5

마. 동반성장 평가결과

2022년 2분기 공시부터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등급이 공시항목으로 추가되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동반성장평가결과를 공시하게 된 것이다.

동반성장은 ESG관점에서 협력사와의 상생발전 추구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협력사와 단순한 구매계약관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조력을 주고받는 관계의 형성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ESG 가이드라인은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협약사항 등을 공시 내용에 담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상기 ‘동반성장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위탁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수행하며, 동반성장 활동 추진실적 및 중소협력업체 대상 체감도 조사 결과와 가점 감점을 합산해 평가한다. 대상기관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 제출 기관 지정 고시」를 통해 정하며, 기업형태(공기업형, 준정부형·기타형), 기업규모(선도형, 일반형)을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나눠서 유형 내 상대평가한다. 점수를 토대로 최우수: 96점 이상, 우수: 90점 이상, 양호: 80점 이상, 보통: 70점 이상, 미흡: 70점 미만의 5단계로 결과 등급을 구분하여 발표한다.

2021년 평가결과는 13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발표된 바 있다. 최우수를 5점으로, 미흡을 1점으로 등급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평균한 결과 기타공공기관의 평균이 가장 낮고 시장형 공기업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단 기타공공기관은 3곳(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유통)만 대상에 포함되어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개선필요’ 기관이 82곳중 23곳으로 높은 비중(28%)을 차지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실적이 대체로 저조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22〉 기관 분류별 동반성장 평가(2021년) 등급 현황

	등급별 기관 분포(개)						평균 등급점수(점)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필요	합계	
공기업(시장형)	9	1	3	2		15	4.1
공기업(준시장형)	1	11	3	4	2	21	3.2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5	3	1	2	1	12	3.75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11	8	19	21	23	82	2.54
기타공공기관		1		1	1	3	2.3
총합계	26	24	26	30	27	133	2.93

주: 우측 마지막 칸의 평균 등급점수는 최우수 5점~미흡 1점으로 환산하여 평균한 수치임

유형별로 보면 에너지 유형 기관에 최우수 등급이 주로 분포하며, 반대로 농림수산 환경, 고용보건복지 유형 기관은 개선필요 등급 기관 비중이 높다. 등급점수가 양호 이상인 유형은 SOC, 금융, 산업진흥정보화, 에너지 기관이다.

〈표 IV-23〉 기관유형별 동반성장 평가(2021년) 등급별 분포

	등급별 기관 분포(개)						평균 등급점수(점)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필요	총합계	
SOC	1	7	6	2	3	19	3.1
고용보건복지	1	-	4	4	6	15	2.1
금융	3	3	1	2	1	10	3.5
농림수산환경	2	3	1	1	8	15	2.3
문화예술외교	-	2	2	2	2	8	2.5
산업진흥정보화	4	5	6	5	3	23	3.1
에너지	12	2	3	4	1	22	3.9
연구교육	1	1	2	3	3	10	2.4
기타	2	1	1	7	-	11	2.8
총합계	26	24	26	30	27	133	2.9

등급점수가 최저인 고용보건복지 유형 기관의 등급별 기관 분포를 보면, 최우수 1개 기관, 양호와 보통 각각 4개 기관, 개선필요 6개 기관 등이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15개 기관 중 12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IV-24〉 고용보건복지 유형 기관의 동반성장평가 등급별 분포

등급	기관
최우수	국민연금공단(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우수	-
양호	근로복지공단(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보통	사학연금공단(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개선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고용정보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보육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

2022년 2분기 공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 결과 등급 (3단계)가 공시대상 항목에 포함되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시행하다가, 2020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후 이관되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는『개인정보보호법』제11조 제2항에 있다. 진단 내용은 관리체계 구축, 보호대책 수립, 침해대책 수립 등 3대 분야의 13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직전연도 7월~해당연도 6월 실적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회가 서류검증 및 현장점검을 통해 진단하고, 결과 등급은 3단계(양호/보통/미흡)로 구분된다.

최근 자료는 2022년 2월에 발표된 결과로서 2020년 7월~2021년 6월 기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2021년 대상 진단 결과이다. 350개 공공기관의 등급이 발표되었다.

양호=3, 보통=2, 미흡=1로 등급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 전체 등급점수는 2.5로 나타나 기관들의 평균적 수준은 양호와 보통 사이인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과 기타공공기관에서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난다.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보통)을 제외한 전체가 양호 등급이며,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에서도 보통 등급을 받은 두 군데 기관(신용보증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위탁집

행형 준정부기관 중 4곳, 기타공공기관 중 24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SOC 기관의 평균 등급점수가 가장 높고, 연구교육 및 기타 영역의 기관에서 평균 등급점수가 가장 낮다. SOC, 에너지, 금융 기관은 ‘미흡’인 기관이 하나도 없는 반면, 기타 기관중에서는 ‘양호’인 기관의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기타공공기관 및 기타 영역 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25〉 기관 분류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등급 분포

(단위: 개, 점)

	등급별 기관 분포(개)				평균등급점수(점)
	기관수 계	양호	보통	미흡	
공기업(시장형)	16	15	1	-	2.9
공기업(준시장형)	20	20	-	-	3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	11	2	-	2.8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83	65	14	4	2.7
기타공공기관	218	97	95	26	2.3
총합계	350	208	112	30	2.5

〈표 IV-26〉 기관 분류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등급 분포

(단위: 개, 점)

	등급별 기관 수(개)				평균 등급점수(점)
	기관 수 계	양호	보통	미흡	
SOC	23	21	2	-	2.9
에너지	29	25	4	-	2.9
금융	19	15	3	-	2.8
농림수산환경	23	15	6	2	2.6
산업진흥정보화	34	21	11	2	2.6
고용보건복지	48	28	17	3	2.5
문화예술외교	41	21	17	3	2.4
연구교육	88	44	35	9	2.4
기타	43	17	17	9	2.2
계	348	207	112	28	2.5

‘미흡’ 등급의 공공기관과 각 유형별 현황은 다음 표에 나타난 대로,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교육과 기타 분야에 주로 집중된 모습이다.

〈표 IV-27〉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미흡’ 등급 기관 현황

분류	유형	기관명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연구교육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농림수산환경	한국수산자원공단
	기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교육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항공표지기술원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축공간연구원
	고용보건복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노사발전재단
	문화예술외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해양과학관
	산업진흥정보화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농림수산환경	(재)축산환경관리원
	기타	88관광개발(주)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전MCS(주)

가. 청렴도 평가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에 따라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이 결과를 매년 말 공개한다.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우선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¹²⁾를 산출한다. 공직유관단체는 외부청렴도(0.763), 내부청렴도(0.237)를 가중합산한다. 기관규모(정원) 등에 따라 분류¹³⁾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다음으로 감점사항을 반영하는데, 1차적으로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하여 점수화하고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한 조직적 부패사건 등 주요 부패사건, 외부기관 적발률이 높은 기관 등은 전문가 정성평가를 통해 정량평가 결과에 추가로 반영하기도 한다.

132개 기관을 등급별로 분류해보면 1등급 기관은 드물고 2등급과 3등급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12) 각급 기관별 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기관유형별 등급구간을 산정하고, 기관의 청렴도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산정

- 1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보다 유형별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점수가 높은 기관, 5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에서 유형별 표준편차의 1.5배를 뺀 점수 미만인 기관
- 기관유형 내에서 5등급이더라도 청렴도 점수를 기준으로 전체 기관 분포에서 4등급 기준 이상인 기관은 4등급으로 조정하여 형평성 제고

13) 중앙행정기관 : I 유형(2,000명 이상), II 유형(2,000명 미만)
공직유관단체 : I 유형(3,000명 이상), II 유형(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III 유형(500명 이상 1,000명 미만), IV 유형(500명 미만), 지방 공사·공단, 연구원 자료: 2021년도 청렴도 평가 보도자료

〈표 IV-28〉 기관 분류별 청렴도 등급 (2021년 기준)

(단위:개)

	기관수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공기업(시장형)	16	-	9	5	2	-
공기업(준시장형)	21	-	10	8	2	1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	1	8	2	2	-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59	1	17	26	15	-
기타공공기관	23	-	9	6	5	3
총합계	132	2	53	47	26	4

〈표 IV-29〉 기관 유형별 청렴도 등급 (2021년 기준)

(단위:개)

	기관수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SOC	19		7	7	3	2
고용보전복지	15	1	6	6	2	
금융	15	1	11	2	1	
농림수산환경	15		2	6	7	
문화예술외교	7		4		3	
산업진흥정보화	16		5	6	4	1
에너지	25		15	8	2	
연구교육	7		2	4	1	
기타	13		1	8	3	1
합계	132	2	53	47	26	4

나. 여성 임원 비율

앞서 살펴본 주요 공시 지표 체계 중 K-ESG는 거버넌스(지배구조) 관련 정보공개 항목으로서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와 성별 다양성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항목은 통합공시에서 ESG 공시항목으로 추가된 바 없지만 2021년 이전부터 공시되고 있던 공공기관의 임직원 현황을 통해서 여성 임원 현황과 기관장, 감사, 이사 현원(비상임 포함)의 합계로 구하여 살펴볼 수 있다.

2022년도 지정 기관 370곳(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등 부설기관 포함) 기준,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2021년 기준 22.0% (815명)이며 2017년 11.3%(398명)에서 2020년 22.3%(823명)까지 증가했다가 2021년 22.0%(815명)으로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관 분류별로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에서는 2%에서 14.2%로 증가하여 가장 큰 12.2%p의 개선이 있었고, 준시장형 공기업에서는 6.7%에서 18.0%로 11.3%p 증가하였다.

〈표 IV-30〉 기관 분류별 여성임원 비율

	기관수 (개)	여성임원 비율(%)						
		2017	2018	2019	2020	2021	'21-'17	
							평균	증감폭(%p)
공기업(시장형)	15	2.0	7.4	10.8	13.8	14.2	9.6	12.2
공기업(준시장형)	21	6.7	9.9	15.7	16.5	18.0	13.3	11.3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	8.6	16.5	17.8	16.8	17.4	15.4	8.8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85	17.2	21.9	24.3	25.5	26.6	23.1	9.4
기타공공기관	236	10.3	15.4	18.2	19.5	18.3	16.3	8.0
합계(평균)	370	11.8	17.5	21.1	22.3	22.0	19.0	9.2

주: 2022년 지정기관 370곳(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등 부설기관 포함) 기준

기관 영역별로 살펴보면 산업진흥정보화 및 고용보건복지 영역의 기관에서 여성임원비율이 대체로 높게 유지되고, 에너지, 금융영역의 여성임원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31〉 기관 영역별 여성임원 비율

	기관수 (개)	여성 임원 비율(%)						
		2017	2018	2019	2020	2021	'21-'17	
							평균	증감폭(%p)
SOC	23	3.2	10.2	16.4	17.7	19.4	13.4	16.2
고용보건복지	51	15.6	21.3	26.4	27.3	27.1	23.6	11.5
금융	18	5.0	6.6	10.0	13.6	12.3	9.5	7.3
농림수산환경	23	9.8	12.5	14.9	18.9	22.2	15.7	12.5
문화예술외교	41	13.6	20.5	22.9	24.8	24.7	21.3	11.1
산업진흥정보화	35	16.9	22.2	24.0	27.3	27.4	23.5	10.5
에너지	28	4.8	10.7	13.1	14.8	14.4	11.6	9.6
연구교육	102	11.9	16.2	17.9	17.2	15.3	15.7	3.4
기타	49	10.3	15.4	17.6	18.9	18.2	16.0	8.2
합계(평균)	370	11.8	17.5	21.1	22.3	22.0	9.2	8.7

주: 2022년 지정기관 370곳(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등 부설기관 포함) 기준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관 순위는 2021년 기준 한국여성정책연구원(100%), 한국화학연구원(100%), 한국보육진흥원(75%) 순이었고 여성 임원 수가 많은 기관 순위는 대한체육회(12명), 한국저작권위원회(10명), 한국보육진흥원(9명) 순 등이다. 주로 여성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 또는 연구교육과 고용보전복지 영역의 기관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높았다.

〈표 IV-32〉 여성 임원비율 상위 10개 기관

(단위: %)

순위	기관명	기관분류	기관영역	비율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교육	100
2	한국화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교육	100
3	한국보육진흥원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고용보전복지	75
4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기타공공기관	고용보전복지	72.7
5	영상물등급위원회	기타공공기관	문화예술외교	66.7
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기타공공기관	고용보전복지	66.7
7	한국영상자료원	기타공공기관	기타	66.7
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교육	63.6
9	한국과학창의재단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연구교육	55.6
10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타공공기관	고용보전복지	54.5

다. 직원 평균 보수 대비 임원 보수

앞서 살펴본 기준 중 SASB는 인권, 노동 관련 정보공개 항목에서, 또 세계거래소연맹의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은 사회 항목에서 직원 평균 연봉 대비 임원 평균 연봉의 배수(임금배율)를 통해서 사내에 공정한 임금체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K-ESG가 이사회 관련 현황을 거버넌스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직원 평균 연봉 대비 이사회에 참석하는 임원의 보수 비율을 거버넌스 관련으로 분류하였다. 해당 항목 역시 ESG 공시항목으로 추가된 바는 없지만 2021년 이전부터 공시항목으로 지정, 공개되어온 직원 평균 임금과 임원 보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직원 임금은 정규직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으로, 임원 보수는 상임임원 기준 평균 보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2022년 지정 공시기관이 2021년에 대해 공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정보가 있는 355개 기관 대상 분석결과 2021년 평균 임금배율은 2.5로 나타났고 2017년의 2.3에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된다. 기관 분류별로는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3.3으로 가장 높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2.3으로 가장 낮지만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영역별 비교 결과 금융분야에서 배율이 평균 3.8로 가장 높고 다음 산업진흥정보화, 에너지, 연구교육 분야가 동일하게 2.6으로 나타나 금융분야의 직원 평균 연임금 대비 임원 보수가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분야는 SOC로 2.1이며 다음 문화예술외교, 기타 순서로 나타났다.

〈표 IV-33〉 기관 분류별 직원 평균 보수 대비 임원 평균 보수 배율

	기관수 (개)	임원 평균 보수/직원 평균 임금 배율					
		2017	2018	2019	2020	2021	'17~'21평균
공기업(시장형)	15	2.4	2.5	2.7	2.6	2.5	2.6
공기업(준시장형)	21	2.3	2.3	2.3	2.4	2.3	2.3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	2.6	2.9	3.3	3.2	3.3	3.0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81	2.4	2.4	2.5	2.5	2.5	2.5
기타공공기관	225	2.2	2.3	2.3	2.4	2.4	2.3
합계(평균)	355	2.3	2.3	2.4	2.4	2.5	2.4

〈표 IV-34〉 영역별 기관 직원 평균 보수 대비 임원 평균 보수 배율

	기관수 (개)	임원 평균 보수/직원 평균 임금 배율					
		2017	2018	2019	2020	2021	'17~'21평균
SOC	23	2.1	2.2	2.3	2.2	2.1	2.2
고용보전복지	47	2.1	2.2	2.3	2.3	2.4	2.2
금융	18	3.2	3.6	3.8	3.8	3.8	3.7
농림수산환경	23	2.2	2.3	2.3	2.3	2.3	2.3
문화예술외교	39	1.9	1.9	2.1	2.1	2.2	2.0
산업진흥정보화	34	2.6	2.6	2.6	2.7	2.6	2.6
에너지	28	2.4	2.3	2.4	2.5	2.6	2.4
연구교육	96	2.4	2.5	2.5	2.6	2.6	2.5
기타	47	1.9	1.9	2.1	2.1	2.2	2.0
합계(평균)	355	2.3	2.3	2.4	2.4	2.5	2.4



1 요약

국내외 ESG 기준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행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은 각 기준이 제시하는 ESG의 기본요소를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부의 출연·출자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상품의 생산·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특성에 의해 거버넌스 부분의 추가 공시항목 발굴이 어렵고 환경 부분에서도 원자재 또는 재활용 관련 공시항목, 사회부분에서 제품 표시 관련 항목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22년부터 도입된 노동이사제 도입현황 관련 항목은 향후 거버넌스 부분에서 추가 공시 항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30년으로 예정된 상장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에 보조를 맞추고자 하면 공공기관의 ESG 공시는 이제 항목 확충보다 체계 정비에 초점을 두어 지속적인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사 관련 현행 공시정보에 기반해 성별 비율 지표 등을 자동산출하거나, 관련 항목을 모아 기관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통계 형태로 공시하는 방안을 우선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관 분류별, 유형별로 ESG 공시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기타공공기관 분류에서 실적이 낮고 공기업의 실적이 좋다. 환경 영역에서는 녹색구매비율, 온실가스감축률, 저공해 자동차 현황의 실적을 살펴보았다. 녹색구매비율은 대부분 기관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잘 관리되고 있는 항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저공해 자동차 현황은 의무구매비율 달성률이 78.7%로 녹색구매에 비해 낮고, 타 부분에서는 좋은 성과를 보이는 에너지유형 기관들이 낮은 달성률을 보인다. 온실가스감축률의 경우 감축에 실패하고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난 기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영역에서는 혁신구매액, 기부실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사망자 수, 동반성장 평가결과, 청렴도 평가결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등 항목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관의 예산규모에 영향을 받기 쉬운 구매액이나 기부실적은 규모가 큰 공기업에서 실적치 또한 높다. 그런데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사망자 수도 이런 대규모 기관이 수위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여성 임원 비율, 직원 평균 임금 대비 상임 임원 평균 보수를 현행 공시정보를 토대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직원에 비해 임원의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금융 유형이었으며 반대로 SOC 유형은 이 임금배율이 크게 높지 않았다.

〈표 V-1〉 주요 ESG 공시항목의 기관별 실적 특징

영역	공시항목	평균	특징
E 환경	1) 녹색구매비율	83.3%	100%달성 23개, 90%대 달성 기관 91개 기관으로 대부분 기관에서 관리가 잘 되는 지표
	2) 온실가스 감축률	20.9%	산업진흥정보화 유형 기관의 감축률이 40.7%로 가장 높고, 에너지 유형 기관이 다음이며 감축에 실패한 기관도 다수 있음
	3) 저공해 자동차 현황	70.3%	의무구매비율 달성률 70.3%로 녹색구매에 비해서는 달성률이 낮음. 타 지표에서는 달성률이 높은 에너지 유형 기관이 여기서는 달성률이 가장 낮고 다음 고용보건복지, 산업진흥정보화 유형 기관 순으로 달성률이 낮음
S 사회	4) 혁신구매액	12.9억원	준시장형 SOC 공기업과 시장형 에너지 공기업이 혁신구매 총액에 기여분이 크고 상위 10개 기관 실적이 전체의 94%로 집중도가 높음
	5) 기부 실적	10.3억원	SOC, 에너지, 금융, 문화예술외교 순으로 기부금액이 크고 기부금액이 0인 기관도 350개 중 49곳 존재
	6)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5.7억원	혁신구매액과 동일하게 SOC 기관 및 에너지기관 실적이 총액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함. 실적 0인 기관은 364곳 중 18개 기관
	7) 산업재해·안전사고 사망자 수	0.6명 (5년누적)	366기관 중 10%인 36개 기관에서 지난 5년간 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상위 10개 기관에 SOC 공기업 5개, 에너지 공기업 3개 기관 포함
	8) 동반성장 평가결과	양호	에너지 유형 기관의 성과가 우수하고 농림수산환경, 고용보건복지 유형은 개선필요 등급 기관 비중이 높음. 고용보건복지 유형 기관중 기타공공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이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사례도 많음
	9)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	보통 ~양호	SOC기관의 평균 등급이 가장 높으며 기타공공기관 및 연구교육·기타 영역의 기관을 중심으로 향상 필요

영역	공시항목	평균	특징
G 거버 넌스	10) 청렴도 평가결과	2~3 등급	1~5등급 중 주로 2,3등급에 분포하며 다른 항목에서는 우수한 공기업군에도 1등급 기관은 없음
	11) 여성 임원 비율	22%	여성 진흥 목적의 공공기관에서 가장 크고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고용보건복지 유형에서 높음
	12) 직원 평균 보수 대비 상임 임원 평균 보수	2.5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금융 유형에서 월등히 높고 SOC 유형에서 낮게 나타남

2 공공기관 ESG 경영관리 정책 방향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얻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관리 당국에서 공공기관 ESG 경영에 대해 일정한 목표 또는 기대수준을 설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이는 기관 유형별로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 일부 ESG 관련 평가, 예를 들어 청렴도 평가 등은 공공기관 그룹 내에서 상대적인 등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이 최고 등급을 받는것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해 ESG 경영을 장려하는 구체적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ESG 경영이 확산되는 것이 사회적 선순환을 유도하는 의미가 있지만, 기관들이 경영평가나 공시 성적에 초점을 맞추어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거나 그린워싱¹⁴⁾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괄적 목표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각 부문 항목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에서는 최고등급을 받거나 의무수준을 달성시킬 것을 권고하고, 현재도 준수 수준이 높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만족시킬 항목 수를 늘린다든지, 3년·5년간 해당등급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둘째, 기타공공기관 군 기관들의 ESG 역량 개발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앞선 장에서 살펴본 공시항목별 현황에서 분류별로 보았을 때 가장 낮은 점수나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분류는 대부분 기타공공기관이다. 이는 기타공공기관의 수가 많고 기관간 편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생기관 또는 소규모 기관인 여러 기타공공기관이

14) 친환경 성과를 내세움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 조성을 꾀하지만 실제 환경 영향을 따져보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위장 환경주의'를 의미

ESG 성과를 관리할 역량이 부족한 데에도 일정부분 이유가 있다고 본다. ESG 경영은 협력사의 ESG 역량을 개발하는 것 까지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는 바, 공공기관을 통한 사회·경제적 ESG 확산을 위해서는 이들 기타공공기관의 애로사항 파악을 통한 역량 개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달성 실적이 공기업, SOC, 에너지 등 대규모 기관에 국한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나머지 기관은 대부분 실적이 없거나 전년대비 후퇴하기도 하는 항목이 존재함을 앞선 분석에서 보았다. 이러한 일부 항목에 기반하여 해당 기관의 ESG 성과 전체를 선불리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황 파악 시 여러 항목의 지표를 고르게 파악하고, 한걸음 나아가 해당 항목에서의 성과 달성 여건, 다른 기관들이 평균적으로 달성한 수준 등을 감안하는 것이 권장된다.

넷째, 성과뿐만 아니라 산재,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같은 리스크나 위험요인도 기관에 대한 평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항목에서는 뛰어난 ESG 경영성적을 보이는 기관이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사망자 수에서도 상위에 노출된 사례를 앞선 분석에서 볼 수 있다. 성과와 과오 양 측면의 정보를 종합하여 해당 기관을 평가하되, 양 측면의 각기 다른 중요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률이나 동반성장 부분의 성과가 두드러진다고 하여 사망자 수 증가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같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현황 분석, 평가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 아무리 ESG 경영에 힘쓰더라도 정보 공시에만 그치거나 적절한 후속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 언론보도 또는 기관 홍보에 그친다면 본래 목표한 대로의 공공기관을 통한 ESG 선순환 구조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시항목이 추가되고 가용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쪽으로 제도가 발전하는 것은 이를 기반으로 한 시사점 제언, 방향성 제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정책당국이 항목 정비와 정보공개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단계의 역할을 맡고 있는 연구자들의 관심도 요구된다.

〈부표〉 분류별 기관 일람 (2021년 지정 기준)

- 기관 목록 및 분류는 2021년 지정 기준,
기관유형은 2022년 알리오플러스 상 정보 기준

분류 유형	기관수 (계)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SOC	23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한국상하수도협회
고용 보건 복지	4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노사발전재단 대한적십자사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분류 유형	기관수 (계)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학진흥원
금융	18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조폐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농림 수산 환경	23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APEC기후센터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환경보전협회
문화 예술 외교	41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세종학당재단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외동포재단 정부법무공단 태권도진흥재단 통일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 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분류 유형	기관수 (계)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한국문화번역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업 진흥 정보화	36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 2021.9.)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 2021.9.)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공영홈쇼핑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에너지	27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분류 유형	기관수 (계)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연구 교육	88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국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분류 유형	기관수 (계)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재단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타	4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분류 유형	기관수 (계)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88관광개발(주)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전직교육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식품안전정보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략물자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테크(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 개발지원공사 한전MCS(주) 항공안전기술원
합계	350	36	235	79

주: 2021년 지정 공공기관 중 알리오플러스 유형별 기관자료(엑셀파일)에서 유형분류를 찾을 수 없는 4개 기관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음.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 이후의 광해광업공단 분류에 준해 산업진흥정보화 유형으로 분류

아시아문화원 : 문화예술외교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

- Fatemi, Ali., Martin Glaum and Stefanie Kaiser. (2018). ESG performance and firm value: The moderating role of disclosure. *Global Finance Journal*, 38, 45-64.
- Friede, Gunnar., Timo Busch and Alexander Bassen, (2014). ESG and financial performance: aggregated evidence from more than 2000 empirical studies, *Journal of Sustainable Finance and investment* 5(4) , 210-233.
- EFRAG. (2021) Proporsals for a relevant and dynamic EU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etting.
- GRI. (2021) A short introduction to the GRI standards.
- 남재우. (2021). 공적연기금 ESG투자의 현황과 과제. 이슈보고서 21-20. 자본시장연구원.
- 사득환. (2020). 공공기관의 ESG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 신왕건. (2021). 국민연금의 ESG 투자 Overview.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발표자료.
- 송단비 외. (2021). 기업 ESG 경영 확대에 대한 산업정책적 접근과 시사점. 산업경제 이슈 제122호. 산업경제연구원.
- 이병윤. (2022). ISSB의 ESG 공시기준 초안 발표와 대응방안. 금융브리프 31-11. 한국금융연구원.
- 이인형. (2021). ESG 평가 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 이슈보고서 21-09. 자본시장연구원
- 한동숙. (2021). 공공기관의 ESG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재정포럼」현안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허경선 외. (202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하고 재무성과 연구. 연구보고서 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 (2021).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
- 한국공기업학회. (2022). 2022 동계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자산관리공사. (2022). 2021년도 캠프 ESG 경영이행보고서

비재무정보 공개 확산에 따른 공공기관 ESG 경영현황 연구

발 행 인 박 용 주 한국재정정보원장

참 여 진 작 성 장윤정 부연구위원

자료지원 김연민 연구원

인 쇄 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발 행 처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679

